

20세기의 문지방을 넘어서며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고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盧 隆 熙

1. 20세기를 보내면서

20세기는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절정에 이른 세기였다. 인간의 필요와 편익증진을 위해 끝없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이 몰고 온 결과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대중소비사회를 출현시켜 인간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해 국가간의 전쟁을 대량살육 대량파괴양상으로 몰고 갔다. 20세기는 인간이 자기목적을 위해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자행한 세기였다. 그리스신화는 우리 인간이 살고있는 지구를 생명이 있는 거대한 유기체로 보고 가이라 라고 불렀다. 그 가이아가 지닌 삼라만상과 신비를 데카르트나 뉴우튼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자연을 거대한 시계장치라고 보게된 이래 부분의 합산이 전체라는 환원주의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문의 세계를 세분화 전문화해가며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결국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객체인 자연환경을 무참하게 짓밟아 놓은 결과를 몰고 온 것이다. 유대·기독교의 구약 성서적 교의가 이를 뒷받침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세기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세기였다. 20세기의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격화는 지구적 규모의 근대화 추진현상과 근대화 추진의 핵심이 경제중심주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근대화는 물질숭배주의, 현세쾌락추구주의, 진보주의, 공업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신생독립국가의 근대화추진이란 한발 앞서서 근대화를 이룩한 유럽·미국을 뒤쫓는 것을 뜻했다. 이리해서 W. W.로스토우의 「경제성장의 각 단계」에 나오는 테이크 오프(이륙)는 개도국들의 신앙적 소망이 되었고 S.구즈네츠가 창시한 GNP는 맹목적 확신의 목표가 되었다. 이륙단계를 거쳐 GNP를 늘린다는 것은 개발을 뜻했고,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의 공통목표로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혼합경제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신봉되

었고 공업화된 북반구의 부유국이나 생존에 허덕이는 남반구의 최빈국을 가릴 것 없이 남북문제를 초월한 국가목표로 되었다. 그리고 이 GNP의 맹점 즉 경제성장 때문에 발생한 사회비용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도시환경·대량수송수단·인프라 등의 악화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이 거꾸로 GNP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자연환경에 미친 부담 즉 환경비용이 무시되고 있다는 잘못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2. 패러다임 쉬프트

20세기를 지배해온 사회의 패러다임(현실에 대한 추상화된 하나의 생각: 신념, 사고방식, 가치와 같은 것을 하나로 집약한 것)은 배제의 패러다임(일명 프론티어경제학)이었다. 경제활동을 위해 천연자원이나 자연생태계를 이용할 때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자원은 무한하고 프론티어는 어디까지나 광대하게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신고전파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자유시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한 첫째로 자유시장은 언제나 사회복지를 극대화시키고 둘째로 천연자원은 무한하게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이른바 흡수원도 무한하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생산활동과 소비 행태는 공업국가의 경우 60년대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계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후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그 뒤에도 근대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이러한 세계관에 따른 국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와 배제의 패러다임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경제활동을 경고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의 생물학자가 미국에 나타났다. R. 카아슨과 G.하딘이 그들이다. 카아슨 여사는 「침묵의 봄」(1962년)을 통해 살충제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사회에 고발했고, 하딘 교수는 「코몬즈의 비극」(1968년)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공재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전체적 파멸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설득했다. 화학공업협회의 서투른 대응으로 마스크를 타게된 「침묵의 봄」은 일약 베스트 셀러로 되어 개발과 성장에 눈이 어두웠던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뒷날 클린턴 정권의 부통령이 된 A. 고어가 상원의원시절에 저술한 「균형 속의 지구」(1992년)에서 자기가 환경론자가 된 경위를 어려서 어머니가 바쁜 가사의 틈을 타 들려준 「침묵의 봄」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음은 유명한 얘기다. DDT의 생산에 기여한 물러박사가 노벨상을 타고 편안하게 살다가 간 것과는 달이 자신의 저작물이 어

면 결과를 몰고 올 것인지를 생각조차 못해본 채 카아슨 여사는 암으로 사망했지만 「침묵의 봄」이 몰고 온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자연보호단체들을 환경보호단체로 탈바꿈시켜 이들이 일으킨 여론의 힘을 통해 세계최초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인 국가환경정책법(NEPA: 1969년)을 제정하게 하였고 스웨덴이 제안한(1969년) 국제환경회의의 개최를 UN에서 미국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무렵 세계적 파문을 일으킨 또 하나의 연구는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1972년)였다. 이것은 뒷날 미국의 환경문제위원회와 국무성이 공포한 「서력 2000년의 지구」(1980년)보고서와 아울러 프론티어 경제학에 찬물을 끼얹는 도전장이었다. 「성장의 한계」는 세계의 인구, 공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소비가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지구는 100년 이내에 성장의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H. 칸이나 J. 사이몬 등 지배적 패러다임의 옹호자들로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연구이고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기회를 박탈하려는 음모라고하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관한 충격적 반성을 촉구하는데 충분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1972년 6월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는 구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불참한 가운데 114개 국가대표들이 모여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여 생태적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특별기구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환경계획(UNEP)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3. 지속가능한 개발

1980년대 초부터 중엽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대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했다. NGO나 정부관계자들이 참가한 국제회의에서 자주 인용된 이 캐치프레이즈는 급기야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들 공유의 미래」(이 보고서는 WCED의 위원장인 노르웨이 수상 G. H. 브른트란트 여사의 이름을 따서 브른트란트보고서라고 불림)에 채택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과개발회의(UNCED)에서 마련한 리우선언에 포함됨으로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대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브른트란트보고서가 밝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장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한다. 동보고서는 지구상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시키는 능력

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계속하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지구의 자연자본 -회복 가능한 자원과 회복 불가능한 자원의 스톡- 의 희생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까닭에 우리가 자연자본의 「이자」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발을 새롭게 재정의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에너지이용 즉 GNP당 화석연료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앞으로 수십년 내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하고 전세계의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상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에서는 지구가 남북문제로 안고있는 부유국과 극빈국 사이의 형평뿐만 아니라 사회내의 형평이나 세대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세대간의 형평이란 국가행동을 규제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장차 태어날 세대도 건강에 좋은 환경과 천연자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는 그것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개도국은 그 나라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부유한 공업국가에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에 따라 세계각국은 아젠다21을 마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할 결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급진적 환경론자들인 「디이프 에콜로지스트」에 의한 비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환경친화적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적 사고의 연장이고 결코 생태 중심적 사고가 아닌 까닭에 종전의 경제성장중심의 개발개념에 환경친화라는 당의를 입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공업국가들의 생산양식이나 소비형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이룩한다고 명분을 세운 채 재래식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개도국의 경우 빈곤문제가 가장 큰 환경문제이고 빈곤극복을 위해서는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가 가장 아쉽다는 그릇된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가버넌스 패러다임과 시민사회

20세기는 근대국민국가(주권국가)의 전성기였고 쇠퇴기였다. 1900년 지구 상에는 25개 나라밖에 없었다. 이들 소수의 나라가 식민지 종주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75년에 이르는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 난 지금 지구촌에는 그 7배 이상의 국가가 난립하고 있다. 20세기는 「행정국가」의 세기였고 「계획국가」의 세기였다. 19세기적 자본주의가 잉태하고 있던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국가는 「관리고지」(코멘딩하이츠)를 점령하고 계획행정을 앞세워 시장경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운동은 국가를 관리고지에서 끌어내렸다. 「정부의 실패」가 원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행정이 정부의 논리중심에서 시장의 논리로 시계추모양 회귀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이외에 사회의 논리라는 새로운 기둥을 등장케 한 것이다. 그것을 이끌어 내게 한 원동력이 바로 가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분야에서 짝이 튼 가버넌스란 「조종한다」, 「키잡이」, 「수로안내인」과 같은 뜻을 지닌 그리스어가 어원이다. 「통치」, 「자치」, 「관리」, 「지배」와 같은 뜻을 지닌 가버넌스란 「개인과 조직, 사와 공이 공통된 문제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의 총체」이고 이것은 「서로 상반되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협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지속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가버넌스란 「특정한 문제영역에 있어서 복수의 주체군이 스스로의 분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형성, 이해조정, 협조행동 등을 거쳐 공통된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공식, 비공식적 행동양식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버넌스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주의, 합리주의, 엘리트주의, 과학주의, 서양보편주의, 근대주의, 물질주의 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되었고 국가의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관여를 가능케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NGO의 활동이 정부나 시장 기능과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가버넌스 패러다임은 지구환경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군의 해결을 위한 방도로도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가버넌스 패러다임 논의가 그것이다. 지구적 문제군의 연구에는 종래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학문 영역의 국제적인 협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종합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자는 물론 정치가 관료로부터 운동가까지를 포함하는 초 학문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데서 출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글로벌 가버넌스 패러다

임은 주권국가체제의 통치, 지구시민사회체제의 자치, 세계시장경제체제의 관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5. 국제환경 NGO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 NGO가 참가한 것은 1972년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가 처음이다. 약 250의 NGO가 옵서버로 참가해서 NGO의 독자적 회의인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환경관계 세계회의에는 NGO포럼이 반드시 열리고 있다. 1992년의 리우회의때 공식으로 집계된 참가자수는 정부간회의에 약 3만명, NGO포럼에 약 1만 8천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간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한 NGO대표가 반수이상임을 생각할 때 NGO의 참가자수가 정부대표수를 웃돌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인권회의(1993년, 비인), 국제인구개발회의(1994년, 카이로), 세계사회개발서밋(1995년, 코펜하겐),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북경), 하비타트Ⅱ(1996년, 이스탄불)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에서의 정부간회의에 NGO의 참가자수가 증가한 것은 참가자격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었다. 원래 세계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NGO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지닌 NGO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완화해서 개도국의 그라스 루트들이 환경문제와 개발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소규모 NGO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것은 UNCHE와 UNCED의 두차례에 걸친 국제회의의 사무국장을 맡았던 모리스 스트롱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원래 UN에는 창설당초부터 NGO협의제도가 있었다. 국제연합헌장 제71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NGO협의제도를 만든 것은 1946년의 일이다. 이 협의제도 아래 UN에 관련 있는 경제사회분야에서 활동하고 또한 민주적 운영과 대표제를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는 자격요건을 갖춘 NGO에 대해서는 NGO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의 심사를 거쳐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협의적 지위는 활동분야의 폭에 따라 「일반 협의적 지위」, 「특별 협의적 지위」, 그리고 「로스터」의 셋으로 분류된다. 환경이나 인권과 같은 특정한 활동분야에 속하는 NGO는 원칙적으로 특별 협의적 지위에 해당한다. 그 권한은 협의적 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와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등 그 하부기관의 회합,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세계회의에 출석해서 문서나 구두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1997년 7월 현재 UN의 이 협의적 지위를 지닌 NGO의 수는 일반 협의적 지위가 88단체, 특별 협의적 지위 602단체, 로스터 666단체 합계 1,356단체이다. NGO가 어떤 단체를 뜻하

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다. UN 경제사회이사회 NGO 협의제도는 「정부나 정부간 협정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단체」라 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NGO란 시민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의미하고 정당이나 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전세계에 환경NGO가 얼마나 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리우회의 때 참가 등록한 환경NGO의 수는 1,400단체였고 NGO포럼에 참가한 단체는 1,600단체 1만 8천명에 이른 것으로 보아 환경NGO의 수는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크기로는 24개국에 국내위원회를 두고 470만 회원을 자랑하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나 32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158개국의 290만 회원을 지닌 그린피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사연구활동에 전념하는 환경NGO로는 매년 「The State of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는 월드윗치연구소나 국제환경연구소(IIED), 세계자원연구소(WRI)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환경NGO들은 홍보·계몽, 전문지식의 제공, 조사·연구, 정책제언, 감시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6. 21세기의 당면과제

지구의 표면적은 5억 1천km²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3분의 2는 바다이다. 이 한정된 육지에 인류가 출현한 것은 46억년의 지구 역사로 볼 때 극히 최근의 일이다. 300만년 전에 원시적인 석기를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오스트라로피텍스가 출현했다고는 하나 오늘날의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고작 4만년전의 일이다. 이들 호모사피엔스가 농업혁명을 이룩한 1만년전의 세계인구는 약400만이었고, 도시문명을 탄생시킨 5천년전의 세계인구는 500만명에 불과했다. 이 500만의 세계인구가 배가기간을 단축시켜가며 증가해서 20세기를 마감한 지금 60억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의 거주공간과 식량을 확보하고 생활유지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인류는 과학혁명을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하여 왔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해결책을 리드한 것은 서구문명이었다. 유태·기독교에 바탕을 둔 서구문명은 자연을 지배·정복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편익만을 추구해 왔다. 3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자연을 지배 정복한 서구문명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몰고 왔다. 그것은 환경문제라는 자연의 보복극이었다. 환경문제는 공해라는 국지적 문제에서 지구환경문제라는 범지구적 문제군으로 까지 확산되어 갔다. 이제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프린스턴대학의 오늘 교수가 제안한

(1974년) 우주식민지(스페이스 콜로니)계획이 실현되어서 지구로부터 1억 5천만킬로 떨어진 「라그란제」 점에 100만인 규모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우주기지를 수천개 건설해서 지구상의 인간을 모두 이주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한 끄적없이 앉아서 당해야 하는 위기인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를 통한 자원고갈과 자연의 자기회복능력의 손상, 인공적 화학물질의 개발·이용·폐기를 통해 누적된 비자연물질의 인간에 대한 가공할만한 반격 등은 모두 일시에 하나의 문제군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세기의 후반기에 들어와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한 인류는 각종국제기구를 통해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서 우리들의 생산활동과 소비행태에 새로운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성과는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방화(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가 도래하여 근대주권국가의 위력은 퇴색해 가는 것이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국익을 앞세워 지구익을 생각 못한 채 공공재·자유재로서의 환경자산을 악화 감소시키고 있는 몰지각한 무임승차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정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국제협력이 아직도 누구나 승리하는 윈-윈 게임에 이르지 못하고 종전의 무한경쟁을 전제로 한 승패(윈-루즈)게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신세계질서의 확립을 소리높이 외쳤다. 그러나 그의 신세계질서란 새로운 「팩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평화를 뜻하듯 서구문명을 앞세운 「글로벌 스탠더드」의 강요를 통해 문화적 제국주의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군을 위해 세계가 해야 할 일은 허다하게 많다. 남북문제의 해결은 으뜸가는 문제이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서 화석연료나 핵연료의 마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의 안정화는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고 교육시켜야 하며 안전한 물과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인간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지구의 허파인 열대 우림과 숲은 회복되어야 하며 토양침식을 통한 지구의 사막화는 방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오존층 파괴, 산성비, 지구온난화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몰고 올 위기의 원인 제공행위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통해 기업가나 소비자가 모두 환경파괴의 가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의 자연관이나 개발론, 또는 물질중심의 행복론이나 국가중심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 방식, 가치관, 행동양식으로

는 달성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제 과감한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 우리의 자세를 180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독일의 와이츠제카 교수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도 크게 부각되었다.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이 오늘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의 오늘의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애써보자.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방향

이성근 영남대 정행학부 교수

SKL2682@yu.ac.kr

목 차

I. 서언

II. 기존 지역개발의 문제

- 2.1 영역적 측면의 문제
- 2.2 추진전략 측면의 문제
- 2.3 추진체계 측면의 문제

III.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리

- 3.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이념과 원칙
- 3.2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능과 평가기준

IV.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방향

- 4.1 영역별 실천과제
- 4.2 과정별 실천과제

V.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례: 낙동강 유역개발

- 5.1 지속가능한 낙동강유역의 발전방향
- 5.2 지속가능한 낙동강유역 발전의 추진방안

VI. 결론

I. 서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20세기는 분명히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자원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살아갈 21세기는 자원고갈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와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발전의 증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문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녀왔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는 야기될 수 밖에 없었고, 개발과 환경의 균형적 조화라는 선언적 표방뒤에는 광범위한 환경파괴가 계속되어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시스템과 논리구조로는 21세기가 낙관론적 사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관론적 사회로 예측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적·지방적·개별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이고 인류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형태와 논리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 전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대두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개발개념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효율성, 생산성, 효과성 제고 중심의 개발개념에서,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위해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문제를 살펴본 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리와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낙동강유역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기존 지역개발의 문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매 10년을 주기로 하여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70년대의 지역개발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였고, 80년대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그리고 90년대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¹⁾

따라서 지역개발정책의 공간적 차원에서도 70년대에는 지역개발의 주요 대상을 산업화나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한정된 지역만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한 반면, 80년대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전국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

1) 김용웅·차미숙,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개발연구원, 1998, pp. 204~210.

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한 경쟁심화, 지방화,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지방의 대규모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하여 모든 지역이 자율적인 경제기반을 갖추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시대별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여기서는 지역개발의 영역차원, 추진전략차원, 추진체계차원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영역적 측면의 문제

첫째, 영역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역개발은 물리적·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분야로 대상을 분할하였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보전부문이 전체 계획 속에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부문별 계획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지역개발은 대규모적, 자원이용적, 환경파괴적, 기능위주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공간범위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역개발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도시와 농촌지역의 격차 증대, 각종 서비스와 시설의 적정배치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저해와 더불어 도시인근의 농촌지역에 저밀도시화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심각한 난개발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2.2 추진전략 측면의 문제

첫째, 추진주체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역개발은 국가주도의 장기적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외부의 자원에 의한 외생적 지역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개발은 자주·자립의 원칙에 기반한 다양성과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개별 지역들이 대규모의 물리적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바, 자치논리로 인한 환경파괴와 함께 주민편의 중심의 민원처리로 난개발 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접근방법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역개발은 하향적이고 공급지향적 접근방법을 띄고 있는 바,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조건과 지역적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급중심적 양상을 띄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원의 과잉투자, 과잉소비 등의 자원고갈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2.3 추진체계 측면의 문제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보면 1999년 현재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약 290여개 등으로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관련법률의 주요 제정목적이 소관부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수평적·수직적 연계·위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법률은 개발일변도의 법률인 반면에 다른 특정법률은 규제일변도의 법률 형태를 띄고 있는 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개발은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민간개발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보전의 경우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환경부문의 NGO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적 조직형태를 띄고 있다. 비록 지역개발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정권·규제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처별·기관별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계획수립과 집행·사후평가단계에서 평가기준, 우선순위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우리나라 지역개발은 영역적,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체계 측면에서 자원소모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바,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의 초래는 물론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그 발전의 정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논리가 필요하다.

III.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리

3.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이념과 원칙

1. 대두배경

과거 물리적·경제적 지표 증대를 기본 개념으로 한 지역개발은 이용 잠재력이 있는 공간상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여기에는 현재 그 이용이 가능하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적 지속성과 기술적 지속성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결과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기술진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적·양적 범위에 대한 설정이 없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무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자원낭비와 무차별적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현재의 경제적 지속성과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70년 로마클럽에서 발행된 “Limits to Growth”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사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역이나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제시된 대안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전세계적으로 공론화되어 종합적인 규범체계인 Agenda 21로 구체화 되었다.²⁾

2.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개념과 목표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rundtland Report(1987)에서는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Caring for the Earth(1991)에서는 “생태계의 환경용량내에서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정의하였다. 또한 유엔환경프로그램은 “지구의 환경용량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국제지방환경자치체협의회(ICLEI, 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적인 환경, 사회·경제적인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정의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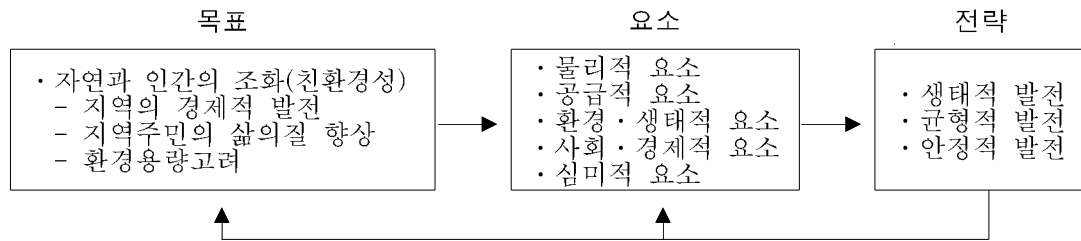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개념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공급적, 환경·생태적, 사회·경제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친환경성과 쾌적성을 바탕으로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격차해소 및 지역의 안정적·균형적·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단순히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방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제·사회·문화·정치·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비롯하여 지역내외,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보성각, 2000, p. 42.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 국토·지역계획론, 서울:보성각, 2000, pp. 456~458.

그리고 계층간의 조화·공존·공생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개념도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칙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통합성과 계획성의 원칙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어느 한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그 구성요소 중 특정부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별 계획에 의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둘째, 조화성의 원칙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크게 환경효과와 개발효과로 구분된다. 환경효과란 한계환경용량의 유지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개발효과는 지역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두 효과는 서로 상쇄(trade-off) 관계에 있어, 이 두 효과의 적절한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인간중심성의 원칙이다.⁴⁾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 추진시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살아갈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합의성의 원칙이다. 합의성이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할 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본이 된다.

3.2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능과 평가기준

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능은 규범적 측면에서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

4) 한국지역개발학회편, 지역개발학원론, 서울:법문사, 1996, p. 371.

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Maslow의 인간욕구단계(a hierarchy of human needs)에서 유추하여 설명할 수 있다.⁵⁾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수요(physical needs) 단계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거주공간과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정당한 수입을 보장하며, 교육과 재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지역적 차원의 서비스와 시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안전·안정·보호(safety, security and protection) 단계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시각적·기능적으로 정연하고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과 소음, 그리고 사고와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셋째, 지원적인 사회환경(a conducive social environment) 단계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정신적 근원과 각종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공간에 대한 친숙감을 갖게 한다.

넷째, 좋은 이미지, 평판, 명성(a good image, reputation and prestige) 단계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신뢰성과 설득력을 제공하고, 지위와 존엄을 제공하며, 개인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혁신창조를 위한 변화(a change to be creative) 단계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근린지역과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여섯째, 심미적인 쾌적한 환경(an aesthetically pleasing environment) 단계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잘 계획된 공간, 물리적으로 형성화된 공간, 그리고 문화와 예술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평가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전 단계의 인간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는 개발방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평가기준은 지역의 물리적 특성, 공급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심미적 특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의 평가기준을 물리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도시팽창을 완화하기 위한 개발의 억제정도, 지역서비스와 시설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밀도, 지역사회의 친밀감 향상과 통행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복합적 환경(토지이용),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따른 지역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적응력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혼잡 및 오염, 에너지 소비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5) Hildebrand Frey, *Designing the City: Toward a More Sustainable Urban Form*, NY: Routledge, 1999, pp. 31~32.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정도,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교통량의 감소와 자동차 통행의 감소, 거주민의 선택가능성 증가와 이동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서비스와 시설의 계층화 정도, 레크레이션·스포츠·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의 접근도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셋째,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경오염, 소음, 혼잡, 사고와 범죄 등으로부터의 환경적 쾌적성, 저밀도의 공간확산을 유발하지 않는 거주공간의 쾌적성, 그리고 각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산림, 농업, 제조업, 여가시설 등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공생적 상호관계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넷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높은 인구밀도와 다양한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사회적·지역적 계층화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 정도, 수요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지역사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역자치의 정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에너지, 수자원, 재화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충족도의 정도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표 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능과 평가기준

인간육구단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평가기준
물리적 수요를 위한 공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공간과 생산공간의 제공 적당한 수입의 보장 교육과 재교육의 제공 대중교통과 통신수단의 제공 서비스와 시설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팽창을 완화하기 위한 개발의 억제정도 -적당한 인구밀도 -복합적 환경수준 -사회경제조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 공급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정도 -교통량의 감소와 자동차 통행의 분산정도 -서비스와 시설의 계층화 정도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안전·안정·보호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기능적으로 정연하고 통제된 환경의 제공 오염과 소음의 제거 사고와 범죄의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생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오염으로부터의 환경적 쾌적성 -거주공간의 쾌적성 -도시와 농촌간의 공생적 상호관계
지원적인 사회환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관계의 형성 지역사회의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지역적 계층화를 감소·제거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도 -지역자치의 정도 -자체충족도의 정도
좋은 이미지, 평판, 명성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성과 설득력을 제공 지위와 존엄의 제공 개인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혁신창조를 위한 변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지역과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회제공 	
심미적으로 쾌적한 환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 계획된 공간 물리적으로 형성화된 공간 문화와 예술활동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전체의 심미적 수준 -도시부분의 심미적 수준 -중심성과 특정장소의 심미적 수준

자료: Hildebrand Frey, *Designing the City: Toward a More Sustainable Urban Form*, NY: Routledge, 1999, pp. 32~33에서 재구성

다섯째, 심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전체에 대한 심리적 수준, 지역의 근린지역, 지구 등의 지역 일부에 대한 심리적 수준, 그리고 중심지 혹은 특정장소에 대한 심리적 수준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단순히 환경의 쾌적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정도 및 사회·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심미적 만족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물리적, 그리고 환경·생태적 조건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공급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미적 측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V.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방향

4.1 영역별 실천과제

1. 도농통합적 공간구조로 균형적 지역발전 도모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체계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전반적인 국토이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실질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분적 계획체계는 국토공간과 지역공간체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중복적·배타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간발전과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분화된 공간체계를 통합·연계화된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수립시 도농통합적 접근방법과 광역적 접근방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개발의 사업체계에 있어서도 물리적·경제적 내용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성장 및 환경관리시스템이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의 정비

우리나라는 지난 3~40년간 급격한 도시화, 특히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과밀·과소의 불균형된 국토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지속적 발전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적정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지역생활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주분리에 따른

사회손실의 감소와 더불어 도시팽창을 완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밀·혼잡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과소·오염의 문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환경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주근접형 생활체계를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리사이클링이 보장되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하는 바, 생활환경의 공간적 분포는 집중분산적 구조를 띄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의 각종 생활환경은 단순히 현재의 수준에서 구축·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따른 지역의 재구조화를 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친환경적이고 자족적인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

지역발전은 지역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갖춘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간 비교우위산업의 전문화전략과 함께 지금까지의 제조업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비록 특성화된 산업구조가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는 더 적합할 수 있으나,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유연적 전문화로 인해 안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균형적인 산업구조가 지속적인 지역 개발에 더 적합할 것이다.

4. 저에너지형 지역교통체계의 구축

저에너지형 지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서비스와 각종 시설의 계층화에 따른 선택가능성의 증대와 이동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성 향상 및 오프스페이스의 양호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한 개인자동차 중심이다. 또한 현재의 직주분리적 공간구조는 각종 교통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교통유발에 따른 각종 비용의 증가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지역의 결절지와 결절지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으로 비오염발생의 교통수단의 보급과 기반구축을 지역단위별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참여적 지역문화의 형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정치·자연환경에 적합한 개발내용과 개발방식에 의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입안·집행·평가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개방적 구조를 갖추으로써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 또한 개방적·선진적 구조로 전환되어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가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2 과정별 실천과제

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비전의 명료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명료한 비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적·지방적·개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표면적으로 모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료한 비전을 설정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비전에 대한 명료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환경적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즉 Maslow의 인구욕구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조건·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폭 넓게 하여 사회·경제적 측면, 심미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실효성 있는 지역환경전략의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비전을 명료하게 설정한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환경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목표에 합당한 세부적인 평가기준(criteria)과 평가수단(measurement)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에 합당한 평가기준과 평가수단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환경(자원)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가치에 합당한 개발전략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⁶⁾

6) 조건부가치평가기법은 환경적 쾌적성의 가치, 비시장재화 및 서비스 등의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으로써,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Daniel W. Bromley, *The Handbook of Environmental Econom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6, pp. 630~631.

을 활용한 지역환경(자원)의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각종 개발사업과 차별화와 기능적 연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인해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기금 등의 확충과 같은 자구적 노력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의 창조·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의 정도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 및 위상강화와 전문인력의 확충 등의 실천적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개발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의 독자적인 계획·집행만으로 한계가 있는 바,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폭 넓게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보고서의 친근감있는 디자인과 함께 주민교육을 강화토록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은 지역단위의 초등학교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환류시스템 확립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성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지역개발이 향후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사전평가, 집행, 사후평가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와 불확실성을 야기하였는가에 대한 개방적 환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환류시스템은 목표와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수단에 근거하여 계량적 혹은 비계량적 모형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국가 및 자치단체별로 구축되고 있는 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과정상에 나타난 성과와 한계점을

공간적·시간적 차원에서 정보체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가상적 시뮬레이션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각종 영향, 즉 환경파괴문제와 지역간·계층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례: 낙동강 유역개발

5.1 지속가능한 낙동강유역의 발전방향

1. 기존 낙동강유역개발의 평가

낙동강은 우리나라 5대강(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중의 하나이다. 강 유역은 그 강 유역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난 영역적 의미이다. 낙동강 유역은 낙동강 하계에 의하여 통합된 하나의 지리적 단위로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독특한 자연공간인 동시에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낙동강 유역은 영남지역, 오늘날에는 동남권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네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26%, 제조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다음의 거대지역이다. 낙동강 유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의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보다 높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70년대들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추구라는 개발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선별적 공간입지정책의 결과이다.

낙동강 유역 개발의 전개과정은 50년대 이전에 수(난) 대책, 60년대는 치수대책, 70~80년대는 이수정책이었고, 90년대 들어서는 친수정책으로 전환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낙동강유역의 산업입지를 둘러싸고, 상하류지역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의 낙동강 유역 개발정책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낙동강 유역에는 환경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이 추진되었다. 동남권 지역의 산업입지정책과 도시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낙동강의 수질오염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낙동강 유역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둘째는 그 동안의 낙동강 유역 개발정책은 도시화에 의한 거대도시 출현에 따른 생활용수의 공급과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공업용수의 수요충족을 위한 댐건설 위주의 수자원공급주도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낙동강의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과 각 부문의 개발계획이 상호 밀접한 연계없

이 별도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연계되지 못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에 접근하기보다는 결과만을 관리하는 사후관리 행정에 치중하는 등 개발계획의 부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넷째, 각종 개발계획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사후 영향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오염배출업체의 상류입지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형식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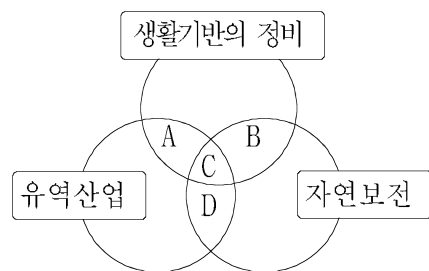
다섯째, 그 동안의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과정에서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낙동강유역의 발전모형

앞으로의 낙동강 유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개발우선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구규모 및 지역특성, 나아가서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자연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발전모형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 및 수량의 유지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의 정비, 유역산업의 육성, 자연보전을 통한 환경창출의 세 부문이 상호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는, 유역전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발전모형이 필요하다.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낙동강 유역의 생활기반의 정비, 낙동강 유역의 적합산업 육성, 자연보전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상호연계속에 기본목표와 개발과제, 그리고 개발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 발전 추진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 A: 유역산업의 활성화
- B: 보전사업의 재원조달
- C: 삼림관리조직의 설치, 치수관리, 친환경정책에 의한 환경창출
- D: 낙동강유역발전추진협의체

[그림 2] 지속가능한 낙동강 유역의 발전모형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삼림의 적정관리가 중요하다. 삼림의 보수력은 유역의 자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포함한 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삼림의 관리와 함께 치수관리 및 자연을 배려한 친환경적 공법 및 자연농법, 유기농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3. 지속가능한 낙동강유역의 발전방향

낙동강 유역의 환경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공시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생활환경과 인공시설물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과의 공생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첫째, 낙동강 유역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낙동강 유역의 환경악화는 그 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환경용량을 감안하지 못한 개발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못한 개발은 환경부하를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성장자체와 생활의 질 개선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낙동강 유역의 개발은 자원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충족을 위한 공급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유역의 개발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의사결정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미비하였다. 낙동강 유역 개발계획 과정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계획내용 또한 경제활동과 환경문제의 상호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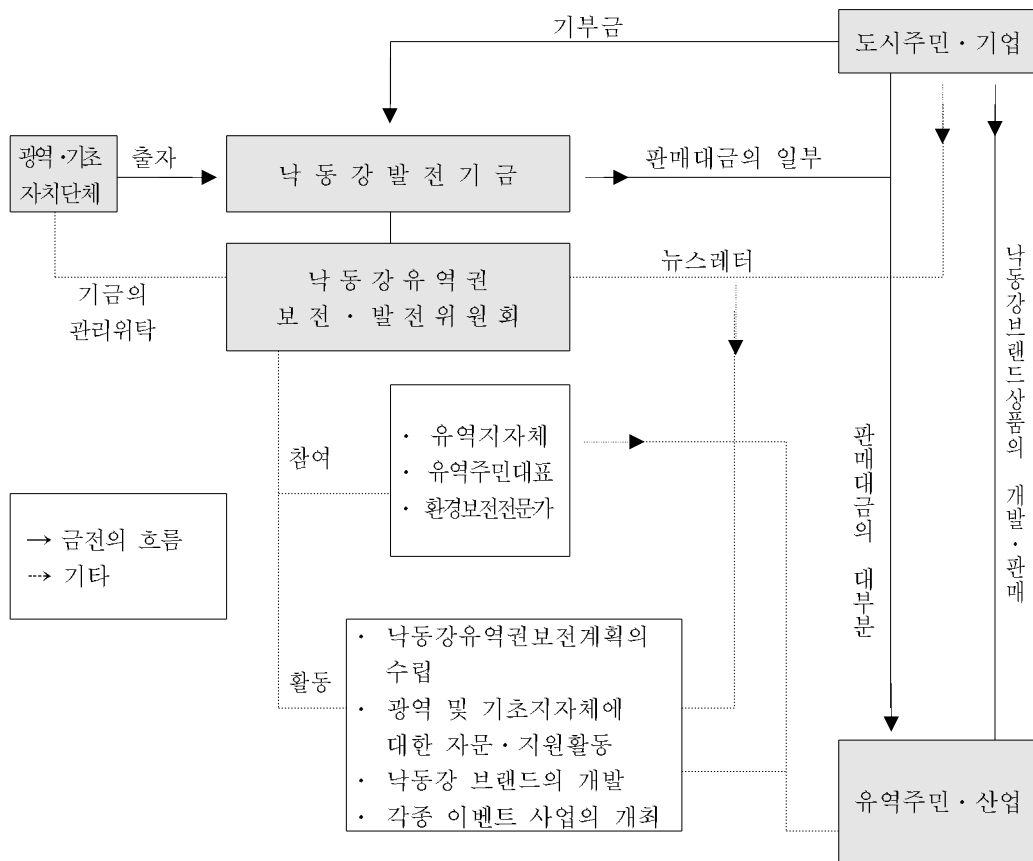
넷째, 낙동강 유역의 여러 하위 지역들의 균형잡힌 개발로 형평성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젠다 21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환경문제를 빈곤이나 빈부격차와 연결시킴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더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젠다 21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양화되고 있는 농림업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아젠다 21은 환경친화적인 농림업의 발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발전과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5.2 지속가능한 낙동강유역 발전의 추진방안

1. 낙동강 유역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가치 ‘지속가능한 낙동강 유역발전추진협의체’의 설립

우선 광역도시권이 진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는 그 만큼 중요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와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조정과 협력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에는 수많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인접하고 있어서, 낙동강 유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하부구조시설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광역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광역협의체는 지역간·정부간 연계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그림 3] 낙동강 유역 발전추진협의체의 개념도

이상과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예로서 낙동강유역발전추진협의체의 설립을 제안한다. 본 추진체는 지역산업과 지역문화진흥, 그리고 풍부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나아가서는 낙동강 유역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낙동강 자연의 혜택을 홍보함으로써 그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유역의 각 산업을 조합한 Zero Emission Pilot Project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는 여러 가지 산업을 조합하여, 어떤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전체로서 폐기물을 제로로 하고자 하는 순환형 생산 시스템의 안이며, 國連大學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낙동강 유역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동 유역에서의 기존의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새로운 유역 산업진흥과 연결될 수 있다.

가칭 ‘지속가능한 낙동강 유역 발전추진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 유역권 보전·발전계획의 수립

둘째, 낙동강 유역권 보전계획에 기초한 각종 보전시책에 대한 제안과 추진

셋째, 낙동강 브랜드 상품의 선정·개발

네째, 낙동강 브랜드 상품구입자에 대한 뉴스레터의 발행

다섯째, 낙동강 유역 수 및 보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의 개최

여섯째, ‘낙동강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

2. 낙동강 유역의 환경 아젠다 21의 제정과 낙동강 Green 마스터 플랜의 수립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도 그 자체로서는 매우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흔히 아젠다 21로 약칭되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강령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아젠다 21의 제28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1996년까지 지방정부의 지방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바, 낙동강 유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환경 아젠다 21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낙동강 Green 마스터 플랜의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3. 낙동강 유역의 지역유형화와 차등적 관리

우선 낙동강 유역에 속한 개별지역들의 개발잠재력을 지역발전에 극대화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생활권별, 산업별, 자원별, 지역발전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차등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정책은 지역의 성장단계에 알맞는 부분의 투자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한다. 낙동강 유역의 발전수준은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 특별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보조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비율과 차등보조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고보조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신기술의 보급, 하수처리장의 건설 등에 보조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정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4. 낙동강발전기금의 설립과 시민 환경감시 기능의 강화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타지역의 도시민들이 타 지역에 위치하는 하천의 청류보전을 위해서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국가나 타 지역자치단체로부터 낙동강유역 개발자금 이전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지방교부세의 활용, 나아가서는 환경세의 일종으로서의 「Green 낙동강세」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낙동강발전기금의 설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에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구체적 활동을 벌이는 범지구적 시민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주도하는 지방차원에서의 다양한 환경보전 운동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낙동강 유역권에서도 시민단체, 지방언론, 학계, 그리고 금융계가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가 운동으로서의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Green 낙동강계획은 실천과제로서의 계획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계획과 운동, 시민과 자치단체가 협력할 때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VI. 결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리 인류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과 파괴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오선언이 채택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형식적으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인류는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서는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세기를 정보화·첨단화·문화의 시대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지속가능성임을 잘 알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기존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와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방향을 영역별 실천과제와 과정별 실천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낙동강유역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7) ISS 研究所, 新心かよへの提言, 1986. 3. p. 3.

첫째,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개념을 단순히 생태적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정도 및 사회·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심미적 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방향에서 영역별 실천과제로는 도농통합적 공간구조로 균형적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정비해야 하며, 친환경적이고 자족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저에너지형 지역교통체계의 구축과 참여적 지역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추진방향에서 과정별 실천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명료한 비전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환경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의 창조·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환류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의 정비, 유역산업의 육성, 그리고 자연보전을 통한 환경창출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연계속에 기본목표와 개발과제, 그리고 개발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발전 추진협의회 설립과 더불어 낙동강 유역의 지역유형화와 차등적 관리 및 낙동강발전기금의 설립, 시민환경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보성각, 2000.
- 김용웅외,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개발연구원, 1998.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 국토·지역계획론, 서울:보성각, 2000.
- 윤양수외,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8.
- 이성근,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낙동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전한 수돗물 생산, '96환경문제 심포지움, 영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1996.
- 이정전,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들”, 환경논총, 제36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8.
- 한국지역개발학회편, 지역개발학원론, 서울:법문사, 1996.
- 환경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0.
- Bromley, Daniel W., *The Handbook of Environmental Econom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6.
- Frey, Hildebrand, *Designing the City: Toward a More Sustainable Urban Form*, NY: Routledge, 1999.
- ISS 研究所, 新心かよへの提言, 1986.

‘위하는 나무’, Ecosystem 그리고 文化文法

李 南 植(안동대 명예교수)

안동 땅 제비원이 성주의 분향이래라.
제비원 솔씨 받아
소평 태평 뿌렸더니
솔씨가 자라나서 어린나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낙락장송 되었구나.

* key words

- . 진하고 깊은 생태학(deep ecology)
- . 제사적 공간
- . 우주관(cosmology; world view)
- . 쭈(藪)와 별서(別墅)
- . 종간의 생존권
- . 문화문법(cognized model & operational model)

<목 차>

- I. 머리말
 - II. ‘위하는 나무’, 聖스런 숲 그리고 bioregionalism
Episode 1 : 李氏家の 성주고사와 숲의 의례
Episode 2 : 600년을 산다는 石松靈(소나무)
Bioregionalism과 숲의 의례
 - III. 林藪, 別墅, 苑林은 생태공원 구실을 한다.
경주 고양수와 계림
별서에서의 田園 생활
 - IV. 李씨家가 경영하는 전통 農家の 共生關係
生計農業經營에서 경험한 人間·動植物關係
Alps 산록에 생태계가 복원되려나
 - V. 마무리
- 參考文獻

I. 머리말

이 글은 머리말과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야기된다. 첫째 테마는 성주고사를 다룬다. 머루덩쿨 다래나무 헤치고 프론티어를 개척하던 농부 일가가 밭을 일구어 농사 짓는 삶의 관행을 간추려 기술한다. 신성한 나무, 침엽수로 된 숲의 보존, 그리고 人格을 부여받은 石氏 소나무가 종자 소나무임을 bioregionalism 개념과 함께 이야기한다.

조선은 外方禁山, 封山 등 산림정책을 펴왔으며, 국유림을 관리하여 왔다. 둘째 테마는 한국인의 자연관에 반영된 숲을 다룬다. 민간 수준에서는 林藪 혹은 苑林이라는 형식을 빌어 산림을 지켜왔다. 이 글에는 경주 황성리 임수를 자료로 제시하여 선인들의 야생조류 보호와 生物共同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한다. 한국의 정원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경관과 생태체계의 원리를 심분 원용하려 했던, 말하자면 자연친화적 환경논리가 바탕에 깔려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테마에는 1930년을 민속지적 현재로 하여 농가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살핀다. 산중에 입지한 농가와 농토를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 상정하여 생각을 펼쳐 보면, 집터, 텃밭, 계단식 논배미, 그리고 골짜기 밭에 植物의 種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생물공동체를 그림 그릴 수 있다. 이 농가는 또한 화초, 과일나무, 대나무, 닥나무 등으로 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共卓生活 아니면 느슨한 공생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이 III장을 마무리한다.

한 농가 안팎에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의 서식처가 있어왔다. 담벽락이나 뒤안길에 이 동물이 놀거나 이동하더라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업신앙이 있어왔다. 이러한 관행에는 농가와 동물간의 신앙적 공생적 상호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귀뚜라미가 방에 들어와도 혹은 노루 한 마리가 집을 잘못 찾더라도 그 놈을 잡지 않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는 행동의 지침이 있어왔다. 행동의 지침에는 문화의 문법이 바탕에 깔려있고 그것이 농사관행과 밀접하게 얽혀있음을 본다. 리우 환경선언이 있는 뒤, 생물종간의 생존권을 국제법으로 입법하려는 오늘날, 쇄똥과 쇄똥구리 그리고 농가간의 상호관계를 새로이 읽을 때가 왔다.

II. ‘위하는 나무’, 썰스런 숲 그리고 bioregionalism

19세기와 20세기 한국에서 일어났던 기하급수적 인구증가는 민가의 가옥신축을 촉진시킨다. 목재수요와 빨감을 위해 임야는 주요자원이었다. 문란한 산림행정으로 인해 산야는 험벗게 되고 민둥산들이 급속히 늘어난다. 나무가 없는 山中에는 火田

이 성행되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겹쳐 火田民의 증가는 깊숙한 심산유곡에까지
임야면적을 크게 줄어들게 했다. 오늘날 한국의 산야의 색깔은 푸르지만 세기 초와
일제강점기의 산의 색은 달랐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1950년대에 한국의 산야는 누
렇게 헐벗었고 산기슭은 붉게 토사를 드러낸 형편이었다.

이 당시 한국의 농산촌에는 점점의 거목이 푸르름을 자랑하듯 버티어 서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을 숲 또는 동수로 알려진 고목들이다. 성소가 어김없이 그 주변
에 있고 동민이 해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올리곤 했다. 이 나무들을 사람들은 신수
(神樹)로 부른다. 이 신수를 민속용어로 「쭈」 또는 「우실」 아니면 「위하는 나
무」라고 했다. ‘위한 나무들’은 國家가 아닌 民間의 의지에 의해 ‘성스런 숲’으로 성
장하고 다행히 保全되어 온 곳이 적지 않다.

이 장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위하는 山’을 사례로 하여 민간의 자연환경 보전
의 몇 측면을 제사와 관련지어 살핀다.

Episode 1 : 李氏家의 성주고사와 숲의 의례

성주목과 성주고사는 山村 농민의 신앙생활을 설명한다. 李씨家의 성주고사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프론티어를 개척했던 입향 당시 정황을 알면 도움이 된다. 민가의
대청에서 위를 쳐다보면 목재들의 짜맞춤을 볼 수 있다. 지붕을 버티어 견디게 될
‘도리’ 아니면 ‘대들보’는 보통나무가 아니다. 굵고 실한 나무를 고른다. 이 선택된
나무를 성주목이라 부른다. 성주는 이렇게 모신다. 한지 두 장을 20cm×30cm의 길이
로 접고 타래실을 어긋지게 네모 난 한지에 감으면 성주 신체가 만들어진다. 성주
를 모실려면 이를 대들보에 매면 된다. 지금도 여기에다 성주神을 모시는 집을 흔
히 본다. 李氏家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제물을 갖추고 의관을 정제한 제관들이
성주고사를 지낸다. 먼저 이 집의 대청에서 고사를 지낸다. 다음날 李氏家의 제관들
은 위하는 山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약 300년 전에 경상도 예천군 용문면에 살던 한 농부가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
다. 새 삶의 터전을 찾아 西北方向으로 移動하여 경상도 문경군 동로의 한 두메산
골에 도착하였다. 小白山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곳은 樹林이 우거진 험준한 골짜
기였다.(오늘날에도 한 자리에 200坪정도 되는 터가 없고, 계단식으로 住居들이 座
向하고 있으며, 西南으로 흐르는 작은 계곡을 따라 논이 계단식 경작지로 되어있
다.) 이 집의 後孫이며 지금도 이곳에 거주하는 李씨는 개척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멀구덤풀(머루덩쿨)과 다래나무를 치고 저희 10代祖께서 여기 ○○골로 들어오셨
습니다. 삼, 사백년 전의 일이지요. 그때는 큰 짐승들이 하도 무섭게 설쳐서 해만 지면

사람문을 닫고, 문을 걸고 빗장을 쳐서 짐승의 공격을 막았다고 합니다. 先祖께서 바로 이 자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 골짜기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단 한 집뿐이었지요. 그 당시의 생활은 밭을 일구고, 감자와 밭농사에 의존해서 살았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줄곧 저 山을 위한답니다.”

李氏家의 조상들은 ○○골에서 밭을 일구고, 밭농사를 했다. 이곳은 후손들에게는 남달리 기념이 되는 空間遺産일 것이다. 바위틈의 다래나무, 우물, 위하는 나무 그리고 聖스런 숲은 地緣性을 뒷받침하는 유산의 목록들이다. 李氏家의 成員은 이 골짜기에서 일어난 神秘스런 일이나 사연을 共有하는 集團이라 할 수 있다. 비탈진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곡식을 심고 살아왔던 이 집단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그들의 生産活動의 場인 동시에 그들의 神話世界라 할 수 있다. 限定된 空間의 땅, 先祖가 開村하는 情況, 그리고 그 조상의 가르침을 기리는 祭祀 등은 李氏家의 삶의 역사적 유산임에 틀림없다.

住民 朴春植씨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주님이 집을 짓는다”라고 한 말은 성주님이 예사 家神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주는 한 집의 創造의 神格이며 숲에서 오신 家宅建築의 靈으로 인지된다.⁸⁾ 李氏家의 開村이나 골 開基祭는 숲에 계신 성주님에 의해 ‘멀구덤풀 다래나무 치고 집을 짓게 되었던’ 새 삶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一家가 創出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주의 세계는 민가의 대청이나 큰방 천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좋은 날을 받아서 성주님께⁹⁾에 빌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조부와 아버지께서 ‘위하는 山’으로 올라가십니다. 산길따라 성스런 숲에 다다르면, 아래로 다가가서 제단 위에 놓인 참지름(참깨기름) 접시에 불을 켵니다. 다음에 무명실로 나무 둘레 四方을 여러 번 둘러 금줄을 치고 나서 가지고 간 제물을 차립니다. 제물은 정화수 한 그릇, (생선) 포 한 마리, 시루떡 한 시루와 백짬 한 그릇, 그리고 실과인데 초석자리에 차립니다. 보통 안여자는 참례 안합니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祖父께서 먼저 拜禮하십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숲의 의례를 가진다. 이 숲 안에서 있는 ‘위하는

8) 성주풀이에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의 술씨 받아 소평대평 뿌렸더니……”는 성주님은 民家를 建築할 材木인 소나무의 造林과 一家의 創出을 의미하는 자세한 分析을 요하는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9) 黃大興(71)씨宅에서는 성주에 비는 이유로 ①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②재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③아들 잘 크고 공부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 1년에 설날, 정월 보름, 추석, 햇곡을 처음 수확했을 때(음 10月) 등 네 번 대청에 床을 차리고 內外분이 같이 두 번 절한다. 성주가 奉安되는 곳은 마루 북쪽 천장인데, 3년에 한번 옷을 갈아 입힌다. 성주는 家宅神 특히 家長의 保護神으로 알고 있으나 次男, 三男, 四男이 分家할 때 새로 성주를 각각 따로 奉安한다. 長男에게는 祭祀와 함께 傳承되나 次男이나 三男이 家口를 창출할 때 큰집 성주神이 分家(創出)되는 것이다. 때문에 家宅 創造神의 성격을 띤다.

나무'는 月城李氏家の 神壇樹임에 틀림없고, 터전을 닦은 이 숲의 의례는 조상의 神話的 존재를 담지하고, 그들의 프론티어 정신을 기리는 祭儀인 것이다. '위하는 山'은 그 제장이 아닌가. 聖火를 밝히며 삶의 週期律에 따라 開村的 狀況이 再演되는 것이리라.

Episode 2 : 600년을 산다는 石松靈(소나무)

등기부에 자기 소유의 땅 2,000여 평을 가진 이 소나무는 나이 600세로 추정된다. 이 소나무는 재산세를 물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 할 뿐 아니라 성을 석(石)씨로 이름을 송령(松靈)으로 하는 人格을 가진다. 매년 정월 보름에는 동네 제사까지 잡숫는 神木이다. 말하자면 人格과 神格을 두루 갖춤으로써 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산다.

Bioregionalism¹⁰⁾과 숲의 의례

우량한 生物의 種은 귀중한 遺産이다. 우량 樹種을 확보하고, 自生地인 現地에서 가꾸고 保全하는 노력은 독일·일본·미국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것이 wilderness의 保全시책으로나 아니면 National park 운영의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한편, 민간이익단체들의 品種개발의 성과에서 生物의 種이 미래의 자원임을 익히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는 앞에 예시한 Episode 1에서 李氏家가 樹種을 확보하는 일을 해왔음을 예증하였거니와 위하는 나무와 그 숲의 제사를 받들으로써 300 내지 400년생 소나무 숲을 自生地에서 가꿀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유럽의 동식물들이 무비판적으로 지구촌 방방곡곡에 도입되어 식재되고 사육되어 급기야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自生地의 種이 제3세계 등에서 그에 比例해서 사라져 갔던 것이다.

국내 특히 경북 북부지역 임야의 별목은 탄광·온돌난방·기타 수요와 연관되어 있다. 종의 多樣性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¹¹⁾ 문경 현지의 사정을 보면, 당시 탄광 갱목의 급격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李氏家가 숲을 온전하게 保全할 수 있었

10) Bioregionalism이 지향해야 할 바를 Gray Snyder는 이렇게 적는다. The bioregional undertaking is to learn our region; to stay here and be at home in it;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and treat it right. 『거북이 말: For A Sustainable Future』誌 1990. 14페이지.

11) 생태적 식민지의 다른 짝의 개념인 생태제국주의는 900~1900년 기간 중 주로 유럽에 자생한 動植物種의 이식 확산을 통해 환경의 유럽화를 달성한 과정을 말한다(A.W. Crosby 1989, 이득연의 글에서 재인용).

던 배경은 위하는 山이 갖는 성주신앙과 조상의 열에 얽힌 이 숲의 神聖性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는 크고 잘 생긴 나무들이 마을 주변과 산에서 목격된다. 이들 나무들은 특정한 씨족의 ‘위하는 나무’와 숲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pisode 2의 石松靈이 경상도 북부지역 소나무 수종으로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자란다. 나무가 반세기 이상 살아남은 예의 하나인데, 그 생존배경이 남다르다. 人格이 이 나무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나무에게 이름을 주고 사람같이 키우니 반 천년동안 살더라는 사실과 숲의 제사는 그곳의 生物種의 保全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自生地, 말하자면 그곳 生態系에 적합한 植生이나 조수들이 그 곳을 삶의 터로 해서 生物 Community를 이룬 곳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 주민이 가꾸고 기르고 保全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는 대응할 때가 왔다고 보며, 여기에 生物圈의 地方自治라는 이념이 새삼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Ⅲ. 林藪, 別墅, 苑林은 생태공원 구실을 한다.

경주 고양수와 계림

Agenda 21의 화두의 하나는 自然과 人間의 共生일 것이다. 한국인과 한국 자연과의 이 共存관계를 위한 노력이 임수(林藪)와 별서(別墅)만큼 잘 드러난 예는 많지 않다.

서라벌 임수의 사례를 보면,

①계림 ②고양수 ③비보임수 ④오룡을 둘러싼 남천 숲 ⑤백률사 서편의 임정수 ⑥밤 숲 등 예닐곱 군데가 도읍 주변 사방에 입지하였다.

이들 숲은 천년을 헤아릴 수 있는 歷史的 유산임에 틀림없다. 서라벌 초창기 육촌의 하나였던 고양부의 터에 고양수가 지금도 건재한다. 황성공원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볼 때, 알지왕의 신화를 간직한 계림도 숲의 구실을 하고 있다.

임수의 설정은 오늘날 산림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천년수림과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그 하나는 야생동물과 야생조류 및 온갖 생물의 서식처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국지 생태계를 살피려는 生態친화적인 조치들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Ⅲ장은 먼저 고양수를 살피고 뒤이어 별서를 들여다보는 구도로 글이 씌여졌으며, 사례로 제시된 기록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실린 해당 항목들이다.

<자료> 황성동 고양수와 계림

경주고양수(慶州高陽藪)¹²⁾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숲. 거의 평탄지이며 숲을 구성하는 수종은 느티나무·회나무·참느릅나무, 그리고 키작은 소나무이다. 남쪽에는 상수리나무가 북쪽에는 소나무의 소경목이 뺏뺏한 숲을 만들고 있다. 원래는 큰 나무들이 들어서 있었으나 바람의 해를 받고, 또 노거목이 되어 죽어 갔으며, 그뒤를 이어 어린나무가 나타나게 된 임황(林況)을 보이고 있다. 고양수는 논호수(論虎藪)라고도 불렀는데, 이러한 숲은 조수(鳥獸)의 번식에 알맞아, 정약용(丁若鏞)의 《경세유표》에는, 숲은 조수를 번식시킨다는 주제(周制)를 들어서 숲이 야생동물과 가축의 생존사육에 필요함을 설명하고, “일반 백성에 대한 급식도 중요하나 국가예산을 절약하여 야생동물에 상당한 먹이를 공급하고 그 번식을 도모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외국과의 수교에는 수림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정책상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임수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무(講武)에 있어서도 수림은 중요해서 왕도 가까운 곳의 숲은 수림림으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뒤 이 고양숲은 방수·방풍의 구실을 했으며, 또 풍치의 가치가 있어 보호한 것으로 믿어진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東京雜記. 經世遺表.

경주계림(慶州鷄林)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에 있는 경주김씨 시조의 발상지. 사적 제19호. 신라의 건국 초부터 있던 숲으로 영역은 약 7,300㎡이고, 느티나무·물푸레나무·싸리나무 등의 고목이 무성하다. 처음 시림(始林)이라 하던 것을 김알지(金閼智) 탄생의 상서가 있는 뒤로 계림이라 부르고, 마침내는 나라이름까지도 되었다. 65년(탈해왕 9)에 왕은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 숲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신하를 보내어 이를 살펴보게 하였다. 사자가 시림에 이르러 보니, 금빛으로 된 조그만 꿩 하나가 나뭇가지에 달려 있고,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으므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아뢰니, 왕은 사람을 시켜 그 꿩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 꿩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얼굴이 총명하게 생긴 어린 사내아가이가 들어 있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아주 총명하고 지력이 많았는데, 이름을 알지라 하고, 그 금계 속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시림을 고쳐 계림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한 나라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韓國民間傳說集(崔常雖. 通文館. 1958).

위의 자료에서 우리는 “먹이를 공급하여 그 번식을 도모한다”는 말을 귀담아 새길 필요가 있다. 林藪의 목적이 天然樹林의 관리보전이라는 일차적 기능을 포함한 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수가 짐승들이 놀고 생식하고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숲이었던 것이다. 온갖 새들의 알을 깐 야생조류의 병아리들을 튼튼하게 하며 날개짓하게 하는 숲이란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새와 야생동물들의 활동과 번식의 서식지(삶의 조건을 충족하는 생활의 場) habitat와의 유사개념을 임수의 조성목적과 배치원리에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の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새들의 보금자리를 없애고, 못할 짓을 저질러 왔다.

動植物의 habitat를 파헤치는 일은 국제협약에서도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2) 경주시 황성리에 있는 이 林藪는 0.87km² 너비의 면적을 갖고 있다. 신라 때 김현(金現)과 호랑이 처녀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면서 이와 연결시켜 논호(論虎)숲이라고도 한다.

좀 냉철히 생각할 때 Rio선언의 Agenda 21에 표현된 지속적 발전이란 개념은 다분히 人間中心的인 발상일 수 있다. 그와 대칭되는 자연환경의 지속적 보전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본디 價値(intrinsic values)를 잘 나타내는 이 말은 기술지향적 지속성이 아니라 생태지향적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A. Dobon, 1996. K. Bosselman, 1999:41에서 다시 인용).

우리는 경주 고양수의 교훈에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를 음미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임수’라는 生態親和的인 천연보호림이며, 歷史的 空間유산임을 실감케 한다.

별서에서의 田園 생활

별서는 살림을 하는 본집밖에 들이나 아담한 골짜기같이 한적한 곳에 지은 조선 주거인데, 별장과 다른 점은 별서에서도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였고 樹木을 가꾸었던 사실에 있다(양병이 1992:25).

소쇄원(전남 담양군 남면), 운림산방원림(전남 진도군 의신면), 화환정 국담원(경남 함안군 칠원면), 석문·임천정원(경북 영양군 입암면), 광한루 경원(전북 남원시) 등 별서는 현재에도 온전하다. 위에 든 잘 알려진 별서·원림 이외에 현지조사를 나가보면 농촌에는 흔히 모양을 달리한 농경·정원 주거를 볼 수 있다.

재실(齋室) 또한 조상 산소 가까이 세워진 건물이며 주변의 산세에 맞게 야외 정원을 갖춘 경우가 있다. 산세를 이용한 별서나 재실은 산골짜기에 입지하는 예가 있다.

별서가 입지한 곳에 실개천이 흐른다. 이를 이용하여 연못을 만들다 보면 연못안의 높은 지면은 물이 줄 때 섬이 된다. 이러한 별서의 연못에는 온갖 벌레와 그물벌레들의 삶의 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自然에 다가서는 生態的 고려를 우리는 별서의 연못 배치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植生을 보자.

국화·작약 아니면 모란 등 花草와 (선비의 변치 않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대나무·소나무·향나무를 심어 두기도 한다. 이른바 절개를 상징하는 수목을 심었더라도 그 배경의 自然과 조화를 이루려는 흔적을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요즘 정원과 차별된다.¹³⁾ 조선시대에 조성되어 왔던 이들 별서·원림의 구성원리에

13)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연당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정영방(1577-1650)은 평생 평화스럽게 살 곳을 찾는다. 그는 경관이 빼어난 골을 선정하여 10여년 동안 그곳의 입지경관과 자연계의 변화를 관찰한 연후에 조심스레 자연과의 접합점으로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그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인문경관화하여 차경권(借景圈)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資源의 생산과 자연환경의 보호, 다시말하면 자연환경의 保全과 保存의 두 개념이 共存할 수 있

는 그 곳에서 살았던 당시 한국인의 生態學的 인지구조를 잘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自然과 人間간의 共存의 원리를 표현한 文化文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시세말로 한국인의 ecosophy, 말하자면 植生과 人間의 共存의 표현 속에서 그들의 文化的 文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農耕生活의 Time table로 월령(月令)이 있다. 주례(周禮)를 원용한 정약용은 人間이 동물과 식물의 선택적 이용을 《경세유표》에 적고 있다.

월령(月令)에, “정월(孟春)에 벌목(伐木)하는 것을 금지하고, 2월(仲春)에는 산림에 불지르지 말게 하며 3월(季春)에는 사냥과 저부(置罟: 그물의 일종. 유망·필에도 같음)·유망(維網)·필예(畢翳) 따위와 짐승에게 먹이는 독약을 9문(門)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4월(孟夏)에 큰 나무를 베지 말며, 6월(季夏)에 우인(虞人)에게 명해서 산에 들어가 나무를 살펴서, 베지 못하게 하며, 9월(季秋)에 쉼(薪)을 치고 숲을 만들며, 11월(仲冬)에는 산림과 수택(藪澤)에 능히 소사(蔬食)를 채취하며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있으면 야우(野虞)가 교도한다. 그리고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날이 짧아지면 나무를 베고 뗏살(竹箭)을 채취한다.” 하였다.

사냥과 관련된 금지 사항을 옛 문헌에서 보면, 사슴 새끼를 잡거나 짐승 알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화살촉에 독을 묻혀 쓰는 일 등 살생행위를 조목조목으로 나누어 금지시킨다.

예닐곱 곳의 임수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 種 다양성의 문제나 환경의 윤리, 그리고 種 사이의 삶의 생존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방향을 던지시 가리키는 것이다.

고양수와 같은 임수, 별서, 원림의 전원생활은 Agenda 21을 설계하는 이 마당에 이미 살다 가신 우리 선인들의 생태친화적인 삶 그리고 그 밑바탕에 기능하여 왔던 文化文法을 다시 음미케 한다하겠다.

IV. 李씨家가 경영하는 전통 農家의 共生關係

신라 땅 서라벌 고양임수를 살필 때,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야생하는 짐승들이 서식하게 먹이를 주려했던 선인들의 환경윤리를 다시 떠올리고 싶다. 오늘날 Environmental Justice 말하자면, 농가의 생계활동에서 生物種의 保存과 그 生存權을 위한 농업관행이 어떤 행동양식으로 있어왔는지 알 수 없다.

필자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여섯간집, 이른바 까치구멍집에 식구가 몇인가 라고. 또 생태적 수용능력을 자문자답하기도 했다. 李씨家를 하나의 본보기

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을 꾸민 것이다. 순수임천정원을 만들어 낸 것이다(민경현 1982:17).

로 하여 사람이외 어떤 動物과 植物의 種이 사람의 住居에 더불어 살고 있는지 현
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기로 한다.¹⁴⁾

生計農業經營에서 경험한 人間·動植物關係

李씨家の 住居는 110여 坪의 대지 위에 안채와 사랑채 및 부속건물로 된 중류층
농가다. 300여 년 동안 聞慶 ○○골에서 李씨 일가가 재배하여 온 곡식의 종은 열
너댓 種에 이른다. 당해 년도에 특정 곡식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종자를 씨배
미에 심어 씨앗을 거둬들인다. 재배작물 외에 이 집 마당 안팎에는 교목·관목·화
초 등 식물 種이 다양하다. 주거의 뒤편 언덕밭에는 대나무·매화·모란·사철나무;
장고방 주변의 채송화·봉선화·배나무; 담자락 화단엔 접시꽃·백일홍 등 화초와
석류나무; 그리고 이 집 감나무·추자나무는 담 안팎을 그늘 지울 만큼 키 큰 나무
들인데 반해 대추나무·가죽나무는 직선으로 곧게 크니까 마당 면적을 덜 차지한
다.

우물가에 비틀린 향나무 두 그루를 합치면 화초·관목류·큰 과일나무 등 30여
종을 셀 수 있다. 이들 수목·화초는 각기 독립된 種의 존재인 것이다. 李씨家 住居
내외에는 여기다 머루나무 닥나무가 텃밭 밭뚝에 식재되어 있으니 이 곳은 이미 미
시생태계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주거의 배경을 이루는 임야의 침엽수와
활엽수목들도 이 미시생물공동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농가의 담
은 상징적 기능을 할 뿐이다. 관목류와 생계농업과의 관계 등 논의는 별도의 기회
에 미루고 이 山村농가와 야생조수들과의 교섭의 양식을 말해 본다.

野生動物과의 교섭을 記述한 글이 극히 드물다. 만일 그런 人間과 動植物간의 생
태적 관계도식이 확인되면 당시의 농사관행이 生態指向的이었나 그 여부를 쉽게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장에서는 산촌농가에서 수집한 현장의 경험을 소략
하게 열거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겠다. 1920~30년대에 한국에 있어왔던 농산촌의
농가에서 목격되는 조수와 농가간의 공생관계의 항목을 나열할 수 있다.

(i) 녹두경작과 과량새의 먹이

14) 많이 움직이지 않고 固定된 動物은 말하자면, 산호와 같이 어떤 조류(藻類)와 같이 生活
하고 있다. 생물학자는 이런 關係를 共生이라 한다(p.83). 着生植物의 뿌리에는 개미들이 솟
하게 짓는 집들이 늘랄 만큼 많다. 개미들은 이 나무 뿌리에 새들어 사는데 그 대신 물어다
나른 먹이 일부가 분해되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한다. 이것 또한 共生이다(p.136). 함께 生活
함을 共生이라 하더라도 有機體가 다른 유기체와 함께 사는 양식은 천차만별이며 共卓生
活·相利共生(mutualism)·또는 기생을 확연히 구별하기는 어렵다(p.178). M. Bates, 1960,
The Forest and The Sea(岡田廣明 옮김).

- (ii) 감·대추·고염 등 익은 과일을 따지 않고 나무에 남겨두는 까치밥 관행
- (iii) 감자밭을 파헤치는 멧돼지와 고구마·감자밭농사
- (iv) 가을 참새떼와 벼농사
- (v) 옥수수나 땅콩을 파먹는 너구리
- (vi) 닭과 병아리를 사냥하는 족제비
- (vii) 제비·참새알을 노리는 구렁이
- (viii) 밤나무 숲에서 밤을 낚아채는 다람쥐
- (ix) 하늘에서 병아리·생쥐를 노리는 매
- (x) 집토끼·닭·집쥐 등을 잡아먹는 여우
- (xi) 염소·토끼·개 등을 잡아먹는 맹수 등이다.

動物의 행동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위의 관계를 보면,

- a) 농축산물을 약탈하는 동물
- b) 먹이를 공유하는 동물
- c) 추수 전후에 농산물 이삭줍기하는 동물

d) 농가에서 서식하는 곤충·조류·소동물·지렁이 등을 먹이로 하는 동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농가의 생계경제와의 적극적 행동양식과는 달리 소극적 관계에 있는 動植物의 예를 보면, 생계농업관행이 動物의 생식이나 먹이사슬 안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i) 쇠똥과 쇠똥구리의 관계에서 농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먹이를 공급한다던가, ii) 퇴비용 건조 야적장에 뱀 등이 알을 낳고 부화한다. iii) 지붕 물받이와 하수구를 따라 지렁이들이 먹이를 구하고, iv) 미나리깡 논에 거머리·수중벌레들이 서식하는 일, v) 귀뚜라미 그리고 서식처가 되는 뒀안길과 처마밑, vi) 제비가 집을 짓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가축과 가금 이외에 농가 울타리 안에서 전개되는 人間과 동물과의 공생관계의 양식이 한국 농산촌 주민의 삶속에 자리잡고 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한 예를 들면, “귀뚜라미를 죽이지 말라”라던가 “집안으로 들어 온 산짐승은 잡아서는 안된다” 등 구전하는 禁忌형 행위규범이 그 한 가지인데, “만약 여기면 ○○하게 벌받는다”는 단서를 붙여 동물의 살생을 막았던 것이다. 다른 공생양식은 “업”신앙과 관련이 있다. 구렁이가 초가집 닭에 걸쳐서 이동하는 광경을 목격한 세대가 우리 50代·60代 장년층 사람들이다. 이 구렁이는 우리 집 아니면 이웃집 “업”이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 문경·안동지방에서 두꺼비를 理財의 업으로 섬기는 집 혹은 족제비를 가호하는 호주도 있다. 동물학대금지 관련법이 있기 훨씬 전에 한국 농촌에는 업신앙을 내세워 동물의 서식처를 울타리 안팎에 용인했던 것이다. 신앙행위의 금기형 규범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신앙적 공생관계로 이끌어 올려 동물의 존재를

이해했던 것이다.

李씨家の 住居와 그 環境은 地衣類를 포함한 植生과 지렁이·개구리 같은 것부터 구렁이에 이르기까지의 生物種이 터를 共有하는 habitat이며, 농사관행은 野生 조수와 먹이를 共有하는 생태적 관계를 실천하여 온 생태 우호적 관행으로 해석된다. 산촌에 입지한 이 농가는 미시생태계를 지탱하여 온 種들의 生物共同體 구실을 하여 온 것 같다. 이는 과장된 말이다. 그러나 인간이 生物圈 위 生物共同體에 소속된 하나의 종으로서 많은 動植의 種과는 相互依存的關係에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일깨워 준 것이다.

Alps 산록에 생태계가 복원되려나

庚辰年 유월 어느 날 羊떼를 돌보던 Wick은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쌍안경을 꺼내 양떼를 응시한다. Wick의 시야에 — 벌건 대낮에 — 낮선 놈이 들어온다. 그는 새끼 양을 먹여치우는 늑대를 목격한다. 늑대들은 70여 년 전에 있는 소탕작전으로 깊은 골짜기로 내몰렸거나 죽임을 당했다. 최근 Wick의 방목지에 이 원래의 주인인 늑대가 돌아온 것이다. 본디 荒野였으니 늑대들이 나타나면 人間, 양떼, 늑대들이 이곳에 함께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Wick은 이렇게 생각한다 (Newsweek, 2000년 10월 23일자).

六十 여 년 전 八公山 기슭에 사향노루들이 놀고 있었다. 이 山野(biological region)에 사향노루가 안 올 것인가. 나는 30년 전 금호강 연안의 벼 못자리에서 뜰 부기 소리를 또한 들었다. 나도 Wick의 생각과 같다. 이 지역 생물공동체의 옛 식구 여우놈과 늑대놈들이 우거진 숲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 놈들이 1930년대와 같이 생활하고 생식하는 지역 生物共同體에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 지역의 生物共同體는 본디 있어왔던 生物種간의 관계를 되찾을 것이고, 個體群의 크고 작음과 먹이사슬 등 생물종간의 상호관계가 건전하게 展開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李씨家の 生計農業經營의 관행을 자세히 추적하여 농가와 생물과의 共生關係 도식을 재음미함으로써 진실되고 깊은 生態學的關心(deep ecology)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實踐의 方向을 위한 生態學的 論理로.

V. 마무리

켄터키는 경마로 이름이 나왔다. 거기에는 잘 달린다는 말들이 다 모여있다. bluegrass 덕택인데, 이 풀은 이 지역에서만 잘 자라는 自生牧草이다. 한 지방의 지

질에 바탕을 둔 토양이 고유한 植生을 풍부하게 만든 예이다. 그러한 자생 생물지역이 경제생활에 미친 예인 것이다.

우리의 산야에는 아직도 높은 가치를 가진 초목들이 자라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다. 미래의 쓰임을 위해서도 토착적인 種을 잃지 말고 보전해야 할 의무를 우리 세대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種의 유출이나, 종의 파괴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통농사관행을 지켜온 농산촌 주민 특히 노인들에게 동참의 기회와 격려의 program을 구상하면 어떨까 한다. 그들로 하여금 예부터 전승되어온 動植物種의 民俗分類와 栽培, 飼養慣行을 들추어내어 그 보전관행에 대해서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현대농업기술과 재배농법이 간과한 지적재산이 묻혀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의 관행이 a subsistence economy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a sustainable subsistence로 나아가는 program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소위 전문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현지의 환경에 대해서 그 곳에 살아온 주민만큼 지식과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다. 현지 주민의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서와 지도 또는 표본으로 등기보존함이 바람직하다. 현지의 미시기상 뿐만 아니라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숙지하는 그들의 식생에 관한 지식은 놀랄만하다. 인간과 動植物의 상호관계 도식을 구상해볼 때, 그들의 지식은 그 지역에 작용하여 온 공생의 틀을 밝히는 하나의 열쇠일 수 있다. 환경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도 설익은 교육내용 대신 현지 노인들의 실질적인 체험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 나름의 국지 생태계에 관한 인식의 틀과 그 이용, 말하자면 그들의 식송령과 ‘위하는 나무’의 의례에 아로새겨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유구조는 한국인의 행위규범 세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한국인의 문화문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회가 온다면, 나는 나무에게 성과 이름을 붙이고 人格을 부여하고 싶다. 아울러 ‘위하는 산’과 보다 많은 ‘聖스런 숲’을 찾고 싶다. 역사적 공간유산 말하자면, 祭祀的 空間 내의 생물공동체 지도를 만들고, 인간과 그 구성종들을 좀더 자세히 살피고 싶다. 그 山野를 자자손손 지켜 온 생물 자생지역의 지킴이들과도 교류하고 싶다.

參考文獻

- 『東京通誌』 卷二
권순구, 1996, 『조선조 산림정책분석』, 석사학위논문(미간).
김영빈·양병이 외, 1992, 『한국전통조경』('92 IFLA한국조직위원회 편), 도서출판 조경.
김학범·장동수, 1994, 『마을숲』, 열화당.
민경현, 1982, 「瑞石池를 中心으로 한 石門 林泉庭苑에 關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권 제1호.
이남식, 1986, 「촌락사회의 전통성과 새환경에의 적응」 『安東文化』 7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_____, 1988, 「촌락경관과 주민의식」 『경북북부지역의 전통문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_____, 1989, 「취락의 공간유산과 수리공동체의 기능」 『安東文化』 10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이득연, 1997, 「지역사회 개발전략으로서 생태관광」 『사회학회발표논문집』, 한국사회학회.
정약용 저, 이익석 옮김, 1977, 『경세유표』 I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장철수, 1991, 「慶尙北道地域의 都邑 및 生活風水」, 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최정호, 1993, 『산과 한국인의 삶』, 도서출판 나남.
福井勝義, 1997, 『環境の人類誌』, 岩波書店.
木原啓吉, 1982, 『歴史的環境-保存と再生』, 岩波書店.
朝鮮總督府, 1934, 『生活狀態調査(7): 慶州郡』.
Bates. M, 1960, *The Forest and the Sea*, Random House.
Bosslemann, K & Richardson, B, 1999, *Environmental Justice and Market Mechanism*, Kluwer Law International.
Kim Sung kyun, 1988, *Winding River Villa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Van De Veer, Pierce, 1998, *The Environmental Ethics and Policy*, Wadsworth Publishing Co.
Crosby, AW, 1989, *Ecological Imperialism: the Biological Expansion of Europe 900-19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danipour, Ali, 1996, *Design of Urban Space*, John Wiley&Son.
Stiling, Peter, 1996, *Ecology: Theories and Applications*, Prentice Hall.
Scott, J. & Simpson-Housley, 1991, *Scared Places and Profane Spaces*, Greenwood Press.
Little, P. 1999, *Environments and Environmentalism in Anthropological Research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Annual Reviews Inc.
Naess, Arne, 1987,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 Press.
Seass, Paul, 1962, *Where There Is Life*, Dell Publishing Co.

우리들이 꿈꾸는 지역문화

신정일(황토현문화연구소장)

1. 들어가는 말

몇 년 전 금강을 주제로 한 역사기행을 한 적이 있다.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의 신무산 기슭에서부터 401KM를 흘러내린 금강 물이 바다로 빠져드는 금강 하구둑까지의 조금은 긴 여정이었다. 금산, 영동, 신탄진을 지나 공주를 거쳐 부여와의 경계지점이었을 것이다. 부여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부여」 언뜻 스쳐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프랭카드를 보며 내가 부여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정책 입안자라면 나는 그런 글구를 생각해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자리에다 「여기는 새벽의 땅입니다」 하고 느낌표를 힘있게 찍을 것이다. 날이 부우영게 밝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부여는 곧 새벽을 의미하고, 새벽은 얼마나 신선한 이름인가 모든 것이 시작이고, 출발점인 새벽이란 이름 앞에 가슴 설레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전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호남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접어들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선두주자 전주”와 “호남의 고도 예술의 고장 전주”라는 두 개의 게시판이 눈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 글구를 본 사람들 중 호남의 고도 전주를 진실로 사랑하거나 지금의 전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 표지판을 바라보고 고개부터 가우뚱거릴 것이다. 내가 전주시를 책임질 위치에 있다면 그런 글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곳은 ‘온’의 고장이다. ‘온’은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이고 ‘完’이나 ‘畵’이나 그 뜻은 모두가 ‘온’이다. ‘온’은 완전하여 흠이 없고, 원만하여 모자람이 없고, 순수하여 티가 없고, 모두가 어울린다는 뜻이다. 또한 ‘온’은 따뜻하다(‘따뜻하다’를 영국의 시인 비어레크는 그의 시 눈 위의 산보에서 「나는 냉담하지 않아 내 속은 온통 따뜻해」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는 위에 언급한 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압축된 우리말로 표현하여 원래의 아름답고 뜻깊은 전주의 의미를 널리 알릴 것이다. 그러한 글구가 쓰여질 때 상투적이고 전시적인 앞의 표어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고 여러 생각들이 모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또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듯이 혁명도 처음은 몇 사람의 허황된 공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형클어질 대로 형클어진 이 세계에서 가능한가. 지방의제 21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단체(황토현문화연구소)가 16년간에 걸쳐 지역에서 실천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글을 시작하기로 한다.

2. 꿈과 현실의 차이는

몇 년 전 TV의 심야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다. 어느 가수가 한 인물과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 초청된 50대 초반의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다. 사회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 나이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참신한 생각들을 개발해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냐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생각될 때마다 실천한다. 아무래도 나는 ‘싶다’주의자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천은 염두에 두지 않고 꿈만 꾸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대학자 남명 조식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배움만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다. 꿈과 현실은 언제나 가깝게 있다. 그 꿈과 현실의 차이를 장자는 그 유명한 꿈의 묘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옛날에 내가 팔락거리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던 꿈을 꾸 적이었다. 나는 내가 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갑자기 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꾸 장자인지, 장자가 된 꿈을 꾸 나비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나비가 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간이 되는 꿈을 꾸 나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듯 나비와 인간의 차이는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 아니 백지장 한 장의 차이만큼 얽은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백지장 한 장이 엄청난 두께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백지장 한 장의 차이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필자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 자신의 생각은 오로지 죽음<자살>뿐이었으나, 죽을 수 있는 용기 또한 없었다. 그 시절 내내 나는 장송곡에 취해서 살았다. 내게는 그때 책과 음악만이 마지막 남은 보루였다. 어느 날 황동규 시인의 초기 시중 「비가」를 읽고 있다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흡인력에 의하여 나는 한 구절에 빠져들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성실이 있다면 포기하는 일 밖에 그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 포기한다는 것 그것만이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

한 출구였다.

「전쟁과 피하기 어려운 죽음에 직면해서 -아락타시아- 조용한 마음으로 만사를 방관하는 이외의 나은 지혜는 없다」는 스피노자의 잠언이 황동규의 시속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나는 내 들뜬 정신을 다스렸고 비우고 또 비우며 그 순간들을 이겨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그 시들을 마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포기하는 일밖에 그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는 구절이 “포기 않는 일밖에 그 무엇이 있을 것인가”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며칠간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포기한다는 것과 포기 않는다는 것의 차이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할 수 없는 그 책의 활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읽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때 나는 어두운 밤에 절망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어찌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의문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홀연히 깨달았다. ‘포기하는 것’과 ‘포기 않는 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엄청난 차이가 옅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 꿈과 현실의 차이를 나는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다.

장그르니에는 말한다. “항상 꿈을 꾸거나 꿈은 공짜라네”라고 그렇다. 꿈은 공짜다. 그러나 그 꿈이 꿈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꿈은 진실로 꿈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꿈을 백지 위에다 서툴게나마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꿈은 현실 속으로 자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다.

그 꿈과 현실을 도스토예프스키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

「제기랄 어떤 이유로 하여서든 자연 법칙들과 산수 법칙들이, 또 <둘 더하기 둘은 셋>이란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내 이마로 그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것이 돌로 된 벽이며 내게 힘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둘 더하기 둘은 넷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꿈에서 현실로 전이해 가는 조금은 위태롭지만 행복한 반란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살아 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불온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즉, 기존의 가치 척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새로우면서 능동적인 문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탄생과 소멸, 절망과 희망, 그리고 꿈과 현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하고 진보해 나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3. 실천하는 꿈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라는 이용이 부른 노랫말이 있었다. 물론 좋은 노랫말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사람이 넘쳐 나는 종로에 병충해뿐만 아니라 공해에 약한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감상적이고, 허구적인 노랫말에 불과할 것이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감나무(충북 영동)를 비롯한 은행나무 등의 유실수를 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살고있는 전주에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옛 지명에다 그와 같은 실질적인 일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몇 년전부터 제안을 했었다.

전주역 가는 길에 해금장 로타리가 있었다. 일명 해금장 사거리라고 불리는 그 네거리 부근이 그 옛날 명주 베의 집산지인 명주골로 이름이 높았다. 팔십년대 그 일대에 육지구라는 행정 편의적인 도시계획이 끝나고 해금장 여관이 처음으로 들어섰다.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해금장 사거리라는 이름이 십수년 동안 불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희극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곳에다 아름다운 옛 지명인 명주골 네거리와 명주골 광장을 그리고 명주길 즉, 비단길이라는 이름을 되살려 주고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열 그루도 좋고, 스무 그루도 좋고, 오십, 백 그루면 더 좋을 것이다. 지금은 약삭빠른 상흔 때문에 고치로 변하기도 전에 가루가 되고 말지만 누에가 뽕잎을 먹고 누에고치가 되고 그것이 비단이 되는 경이(계시관을 자세하게 세워야 함) 그 과정을 삭막한 콘크리트 숲 속인 전주라는 도시 속에서 바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는 샘과 함께 꽃을 조성하고 전주천 변에는 우리 토종꽃이면서 하천 정화 작용도 하는 짙레꽃이나 조팝나무 등을 심어 5월에 짙레꽃 축제 조팝꽃 축제를 연다면 벚꽃이나 장미축제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다음의 예는 장승백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주교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를 장승로 또는 장승백이라고 부른다. 옛사람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었고 마음의 위안처였던 장승이 몇 년 전에 다시 세워졌다. 나이든 사람들의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살아 있는 장승백이에 그 실체를 세워 옛 지명과 도로의 합일을 이룬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나 그 장승이 세워지고 다른 종파의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많은 탄지를 걸었었다. 물론 여러 종교단체들의 다른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몇 천년을 두고 내려온 전통문화의 한 부분인 그러한 것들을 도외시키고 폄하한다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날로날로 사라져 갈 것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바람직한 것들이 많이 있다. 전주시내 천주교에서 이름 붙인 있는 숲정이 성당(진북동 성당)과 용머리 성당 등은 우리 이름 짓기 운동의 한 초석으로 자리잡혀가고 있지만 더 많은 곳에 꽃밭정이 성당(평화동 성당), 붓내성당(송천동 성당이 그렇게 바뀐다면 좋을 것

이고 교회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들의 이름을 붙인다면 지역과 종교,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화하는 좋은 예로 길이 남을 것이다.

또한 오목대 부근에는 청포묵과 황포묵, 그리고 도토리 묵집을, 기린봉에는 열무밭을 서낭당골에는 감나무를(파라시의 집산지) 사정골에는 콩나물을 선원너머(중화산동)에는 미나리밭을 조성할 때, 사라져 버린 전주팔미와 전주팔경이 생활 속으로 되돌아올 것이다(위의 사례는 96년부터 황토현문화연구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전주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옛지명과 우리말, 역사 인물 및 문화 인물을 중심으로 전주의 모든 이름들을 새로 짓자는 운동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

그와 또 다른 예를 외국의 예에서 찾아보자. 1963년에 토마스 블로드라는 사람이 위그모그 홀<런던의 가보 홀>에서 침묵의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수백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쿠펜하이머의 「침묵 속의 파르리타」, 베르가모의 「지리학적인 침묵」, 발베크의 「새로운 제명」 등으로 알려진 대가들의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실링 6펜스를 주고 새로운 자리를 차지했다. 연주회가 시작되고 허공에 두드러 대는 망치 소리 같은 피아노 소리를 헝가리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콘트라베이스와 플루트가 어울려 기묘한 삼중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피상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연주회는 상업 TV방송국의 어떤 PD에 의해 계획된 사기극이었다고 한다. 그 PD의 의도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중들을 우리들은 어리석다고만 볼 수 있을까? 우화 속의 별거벗은 임금님처럼 마음속에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는 유행의 추종자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호기심과 독창적인 기호 때문에 그 연주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본 발제자가 이 지역에서 실천해 온 일들과 다른 몇 개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그 발상의 전환이나 새로운 일들의 모색과 실천을 어느 단체나 특정한 개인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의 주인공이지 국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누가 역사 속에서 또는 정치나 문화 속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역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또는 정치나 문화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말들을 무심결에 내뱉는다. 그 말속에서 사람들은 역사나 정치, 그리고 문화가 그런 것인가. 모든 것이 다 그물코처럼 촘촘히 짜여진 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인 이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할 때 이 세계는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4. 인재육성보다 자연사랑이 우선되어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는 이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땅을 정확히 주시하는 눈을 가질 때 발전적이면서 대안을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어떤 모임을 통해서나 여러 지면을 통해서 공론화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지역의 예를 든다면 이 땅이 전주가 천년 고도의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들이 어떻게 지역문화를 고민하고 참여하고 주체자로 나설 수 있는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동안에 걸쳐 “금강 따라 천리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금강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실시한 금강 따라 천리길 대장정을 하천사랑운동 금강사랑운동본부와 황토현문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였는데 금강사랑운동본부의 구성원들은 전북 군산시 군산고등학교 동문모임들이었다. 30여 년 전에 군산고등학교 동창생 몇사람이 결성했던 ‘금강초’라는 모임이 30여 년 동안 실천했던 단체의 단합과 동문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접고 ‘금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전도양양했던 김재승 회장과 몇몇 후배들이 사단법인 하천사랑운동, 금강사랑운동본부를 새롭게 발족하고 “금강을 바로 알고 금강을 살리자”라는 모토 아래 실천하는 여러 사례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필자는 그들과 함께 열셋새 동안 천리길을 한걸음 한걸음 걸으면서 각 지역마다 있는 중·고등학교 동문들이나 대학동문 뿐만 아니라 침묵모임들이 모여 예를 든다면 전주에서는 전주천을 살리든지 경주에서는 대중천을 맑게 또는 예천에서는 ‘내성천’을 살리는 모임을 결성해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다.(대다수의 중·고등학교 모임들은 장학숙을 지어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키워낸 인재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사회의 악을 끼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의 선에 입각한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것이 모교 사랑을 넘어 지역 사랑, 사람 사랑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지역 내의 자치단체마다 산재한 산과 들 뿐만 아니라 문화재들을 예전에 실행했던 ‘한 회사가 한 산을 가꾸고 보존하는’운동처럼 벌인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곽재구 시인이 좋아하는 탐이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인 것처럼 필자는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김제 귀신사를 좋아하는데 각 회사나 단체마다 지역의 문화재들과 결연을 맺고서 사랑하고 보존하기에 힘쓴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5. 멋의 문화, 삶의 문화

시인이며, 사상가인 김지하 선생이 몇 년 ‘올려’라는 이름의 신 풍류 예술문화운동을 결성했다. 「멋과 자연이 어우러져 나오는 자연스러움 속에 놀고먹고 일하는 창의적인 삶을 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오랜 역사는 일의 문화와 놀이의 문화를 발전과 동시에 축적하며 계승시켜 왔다. 일과 놀이는 삶의 양면성일 뿐만 아니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속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일과 놀이가 일제의 침략과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도로 밀려들어온 서구 문물에 휩쓸려 들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적 불명의 외래 명절들인 발렌타인 데이나 화이트 데이, 장미축제, 열열이 데이(10월10일), 빼빼로 데이(11월 11일) 등의 여러 축제들이 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수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고유의 전통축재인 명절들은 갈수록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 가고 축소되고 있다. 그나마 이 나라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져 가고 있는 지역 축제의 꽃은 무슨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예 : 단풍, 포도, 고추, 인삼 등등) 이러다가 못생긴 것의 대명사로 된 호박 아가씨뿐만 아니라 별 해괴망측한 아가씨까지 선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전라세시풍속보존회에서는 유월유두날 봉숭아꽃 물들이기와 칠월칠석날 봉숭아꽃 물들이 예쁜 손 선발대회를 연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아름다운 멋을 자의적으로 폄하하게 만들고 전통은 고루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구 문물을 걸러짐 없이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족의 전통성에 입각한 그러면서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축제를 개발해 내야하고, 생활 속에 일과 놀이가 결합할 수 있는 생활문화운동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모든 종교단체들이 토착화란 개념으로라도 전통성에 입각한 생활문화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문화축제란 많을수록 좋다. 문화란 반짝이는 별처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의 전유물 또한 아니다. 문화란 도처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손만 뻗으면 있다. 특히 전통세시풍속에서의 우리 놀이문화는 오늘의 현대인들이 주말마다 만나게 되는 여러 행사들처럼 한 달에도 몇 번씩 예정되어 있었다. 정월대보름놀이와 삼월삼짇날의 화전놀이, 오월단오에 유월유두날의 연꽃놀이, 칠월칠석과 백중, 팔월 한가위에 중앙절의 단풍놀이 등 24절기로 나뉘어진 전통 세시풍속은 마을의 잔치였고, 축제였다. 거기에 참여하는 옛 선인들은 일과 놀이가 분명했었다. 또한 누구도 관람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체가 되었었고,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축제가 전통세시풍속축제였다. 전주의 뜻 있는 몇 사람과 문화단체들이 92년 겨울 전라세시풍속보존회는 조직하였다. 전북도민을 위한 정월대보름놀이를 개최하여 여덟 번을 치루었고 화전놀이를 비롯 청소년 축제로 승화시킨 칠월 칠석놀이, 동짓날 팔죽 나누어 먹기까지 여덟 개의 축제를 되살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옛 속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시하고 미명의 세계화만 부르짖고 있다. 전통세시 풍속 속의 마당판은 예술이나 문화가 아니고 음악, 미술, 연극만이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힘들여 차려놓은 전통문화축제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제대로 전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주에는 볼 것이 없다고 내장산이나 선운산, 또는 격포 같은 데로 가는 것이 상식이 되어있다.(우리 나라 곳곳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계여행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전주는 오랜 역사 속에 자리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 그리고 숨은 이야기들이 어느 도시보다 많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 지리,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간 인물들을 긍정적인 면에서건 부정적인 면에서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중의 한가지가 서울 중심주의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는 각 지역의 사투리를 살려내는 일 또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첩경이 될 것이다. 그때 지역에 대한 예정이 생겨나고, 자신이 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뚜렷한 좌표가 설정될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진정한 우리 것 없는 세계화는 있을 수 없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겸허히 들어갈 때가 지금이다.

6. 맺음말

사람은 누구나 경험한 것들을(독서나 사색도 그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토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삶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도 말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졌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일 것이다.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들이 많은 사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러한 사회가 꿈이 있는 사회이고, 꿈이 성취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는 내 가족과 나만 무사하다면 “세상이 다 타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개인주의와 정당이나, 학연, 지연, 혈연이 얽히고 설킨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한한 천체 속에서 한 점인 지구 우리는 그 위에서 잠시 살다가 간다”라는 말처럼 우리모두는 어느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그 지역에서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좀더 겸허하게 자연과 함께하며 사

람과 함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삶이란 절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하기 위해서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 는 노엘 베스페르의 말을 기억하며 지방의제21이 더 많은 꿈을 주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글쓴이 신정일은 80년대 중반에 황토현문화연구소를 발족하여 문화답사와 지역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고 저서로 <동학의 산 그 산들을 가다 : 사람과 산>, <지워진 이름 정여립 : 가람기획>, <나를 찾아가는 하루 산행 : 푸른숲>, 공저 <모악산> 등이 있다.

문화관광개발과 지역사회 참여

강 신 점(삼성경제연구소)

I. 서 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인 향상 및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큰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져온 중앙정부 중심의 광역관광개발전략, 관광단지 중심의 거점관광개발전략은 나름대로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위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관광개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고 관광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경제의 잠식 및 관광지의 독점화는 자칫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이나 지역주민의 소외로 인한 지역소득기반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 또는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community)가 중심이 되어 자기창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정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관광산업이 도입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관광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점차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문화·경제에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개발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아닐 경우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거나 문화와 예술 및 전통을 왜곡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광개발의 대상 또한 기존의 관광단지나 관광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문화적 전통, 문화유산, 생활문화를 갖춘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 문화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과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오히려 문화유적의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와 관련기업,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통해 기존 관광개발과는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개발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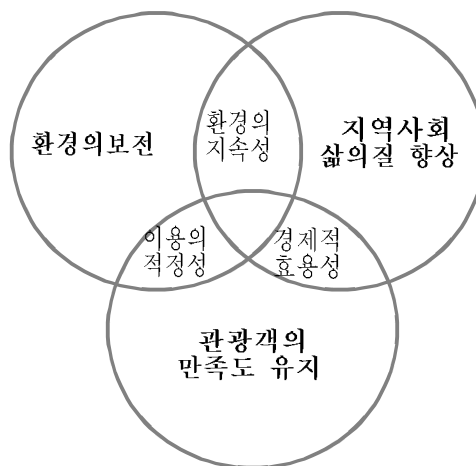
II. 지속가능한 관광과 문화관광개발

1.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현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WCED 1987)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적 개발이어야 하며 생태적 지속성이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한도내의 개발을 의미한다(김남조 1998).

지속가능한 관광은 “현세대의 관광과 관광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차세대를 위해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관광”이다(WTO, 199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호를 고려한 적정한 개발과 활용을 관광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미래세대에게도 자원의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방식은 전통문화,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세대가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광자원의 파괴, 오염, 고갈은 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의 수요와 자원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관광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정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방문자의 관광경험의 질, 지역사회의 삶의 질,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광

경험의 질을 만족시키면서 기본적인 자연자원의 연속성과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셋째는 관광산업, 환경 지지자, 지역사회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광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구를 강조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방문자지역 사회목적지에 대해 상호간의 목적과 협력이 강조된다.

지방의제21은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현세대 구성원들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지방정부, 시민, 기업)이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규제와 상호견제를 통해 친환경적인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지방의제21운동은 생활개혁, 환경보전, 지역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역사회발전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역사회가 중심이된 문화관광개발전략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분야에서도 관광개발과 관광문화의 실태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세계적 흐름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실천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2. 문화관광개발의 특성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와 노령화, 지역경제의 낙후, 지역산업의 불균형 등으로 침체된 각 지역은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자체 현실과 기존 공단유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험한 많은 지역에서 청정산업으로서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개발은 선거철 가장 인기있는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들이 관광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지만 개발재원의 부족, 전문가의 부족과 개발 및 운영관리상의 노하우 부족 등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개발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접근방식이 잘못될 경우 환경파괴, 지방재정 악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사례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관광의 의미와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행위이자 고도의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활동이다. 첫째, 단순한 제조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의 교류로서 사람산업(people industry)으로 불리기도 한다(손대현 1995). 둘째, 다양한 요소와 현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시스템산업(system industry)이다. 셋째, 지역전체가 관광대상이며 관광상품인 토탈산업(total industry)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친절하고 창

의적인 인재육성과 이해당사자(stakeholders)간의 협력이 핵심 성공요인이다.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패러다임 아래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관광개발의 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문화관광개발은 문화자원을 단순히 문화유적지를 관광하거나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임재해 1999). 문화관광개발은 지역의 특성과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이것을 어떻게 특화시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삶은 문화다’라는 말처럼 일상생활속에서의 새로운 문화 창출, 즉 주민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효과 극대화라는 지극히 단편적인 천민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의 터전, 지역 문화를 가꾸어 간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하다. 박제화된 문화재, 문화유적을 소재로한 관광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문화관광이 오히려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문화적 전통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은 삶의 연장이다’, “관광은 문화체험이다”, “관광은 감동을 연출하는 산업이다”란 말처럼 문화관광개발은 문화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가꾸며 수준있는 관광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컨셉은 관광객의 가장 높은 관광동기로 작용하며, 이를 위한 문화마케팅 등이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문화관광개발의 방향은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그 가치를 알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체험을 통해 몰입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것이며, 이때 다양성과 차별화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III. 문화관광개발의 문제점과 방향

사례 1: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 공동체정신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상업주의에 짓밟히고 있다. 집집마다 큰 민박간판을 내걸었고... 하회마을 병산서원 앞에는 컨테이너 민박, 음식점들이 늘어섰고 외지 사람들이 지어대는 카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사례 2: 경주 남산의 기암에 새겨진 마애석불들은 소나무들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것인데 석불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소나무를 자른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일이다.

1. 중앙정부 주도형 관광개발정책의 실패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나름대로 관광개발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온 관광개발이 왜 지역을 살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그간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거점개발방식"으로 요약된다. 거점개발방식이란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집중개발하여 그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균형개발보다는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이 선호되었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우선되었다. 당연히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문화유적, 생활문화 등 지방의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세세한 매력은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관광산업이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명승지 중심의 획일적 개발패턴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했으며, 지역주민은 경제력과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과 개발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개발업무, 인허가업무에 매달리다보니 독자적 기획능력 약화되어 왔다. 대단위 복합리조트, 관광단지식 개발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하나의 '섬'으로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중문관광단지, 경주보문단지와 같은 토지분양 위주의 단지개발은 가능하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은 중앙중심, 관광객의 이용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의 문화 등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활동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관광개발(community based tourism)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관광개발의 추진방법은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며, 개발의 주체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존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철저히 지역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역성(locality)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자원의 개발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관광시설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잠재력이 갖는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저이용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창출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 즉 지역주민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2. 관광시스템의 구축과 파트너십 부재

관광목적지로서 지역사회는 관광을 위한 총체적 환경(environmental setting)으로서 관광객의 경험, 만족, 재방문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관광산업은 종합적인 시스템산업이므로

서 관광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체, 이해당사자들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관광진흥은 한 개인 또는 단체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시민, 자치단체, 관광사업체, 여타 관련단체 등이 망라된 경주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란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육성정책은 있었으나 관광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함을 수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조정력, 즉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으로 관광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협회는 기존의 상권 및 업계 권익보호에 바쁘고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통합적으로 경주를 마케팅할 조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역내 협력적 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이러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직이 있더라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할 조직이 아닌 친목조직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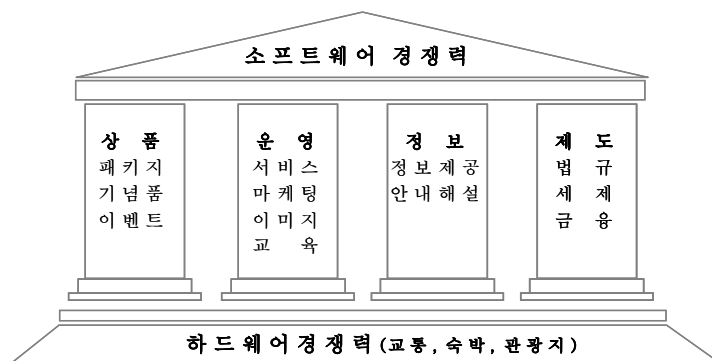
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등 지역외부와의 네트워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지역에서 자치단체협의회의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인 관광홍보에 그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계와의 연대를 통해 연구조사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시민단체(NGO)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및 협력을 유도하도록 한다.

3. 소프트경쟁력 약화

관광산업은 아이디어전쟁이다. 역사자원과 신비한 경관, 각종 편의시설이 하드 웨어라면 아이디어는 그것을 빛나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적 명소가 된 곳은 셀 수 없이 많다. 20여종 축제의 연중개최로 연간 1,300여만명을 끌어 모으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 음식문화 제등 예술문화이벤트로 연간 300만명을 맞아 들이는 일본 오이타(大分)현 등이 좋은 예이다.

관광개발이면 모두 호텔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와 제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또는 시설중심으로 개발되어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부족하다. 보문단지는 밤이되면 적막한

관광지로 변하고, 관광안내소는 있으나 안내할 정보가 없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와 시설을 갖추어도 고객에게 재미와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고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관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행위이자 고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활동이다.



<그림 2> 소프트경쟁력의 개념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resources)에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부가시켜 관광객이 구매(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관광지란 놀이시설, 숙박시설, 식음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감동적인 서비스 즉 볼거리와 놀거리를 연출하는 극장과도 같은 것이다. 소프트경쟁력이란 소프트측면에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하며, <그림2>과 같이 상품, 운영, 정보, 제도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드웨어의 확충과 아울러 이러한 소프트한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지역민의 공감대 위에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여 수준높은 문화적 매력을 출하는 소프트경쟁력 확보에 관광진흥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IV. 지역사회 참여와 의제사업의 제안

환경과 경제성장을 통합시킨 지속가능한 개발은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며 지방의제사업의 과제도 달라질 것이다. 즉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으로 해석하여 환경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 혹은 성공적인 발전 강조함으로써 환경문제는 단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어느 경우이든 관광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 환경의 보전은 관광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 의제사업은 지방정부, 관광산업계, 시민단체(또는 시민) 등 주체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능력을 높이고(capability building), 지역사회의 실행수단을 확보하고 (community empowerment), 지역내외부 및 부문 간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다.

1.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

관광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관련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시설위주의 물리적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성을 살린,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자원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 제도개선 및 지원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보존과 평가, 방문자 관리, 난개발 방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관광홍보와 안내체계의 개선, 마케팅활동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관광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지역문화관광개발과 관련 지역정책의 통합

관광시설 개발만이 관광개발의 전부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 제조업 등 1, 2차산업에 관광서비스라는 3차 산업적 요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관광개발과 지역정비, 관광시설과 지역내 편익시설의 복합개발, 관광시설과 지역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자원부족을 극복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합산업인 관광산업은 관광담당부서만으로 결코 육성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계획 및 건설, 복지 등의 관련 부서와의 정책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 연구조사 사업의 지원 또는 공동수행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대상지를 조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이용관리에 대한 기준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관광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한다.

2. 관광산업계의 협력(cooperation) 유도

□ 관광산업 내외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복합성이 강조되는 관광산업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핵심성공요인.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은 한 개인 또는 단체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예를들어 관광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여하는 관광사업체, 여행안내자, 서비스업 종사자, 안내소 직원 등 업종별 협회를 통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 문화자원을 테마로한 관광상품의 발굴 및 관련 시장의 육성

문화유산 관광은 자칫 둘러보기식 관광이 되기 쉽다. 관광자 입장에서는 지역문화 체험기회 특히 진짜(authenticity)를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 한다. 문화는 화려한 그릇 그 자체가 아니라 그안에 담긴 맛깔스런 음식이다. 따라서 화려한 시설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과 기념품, 이벤트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광상품이 단기적으로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관광시장(mass market)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 관광사업자용의 교육운영지침 매뉴얼 작성

관광객을 모집하고 관광목적지에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사업자의 역할은 관광객의 관광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대량관광형태에서는 사업자의 역량부족과 비도덕적인 행태로 인해 관광객의 불만과 환경파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산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자용의 원칙 및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지침은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폐수배출, 경관파괴, 서비스질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개발과 운영관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제고 및 교육

가장 좋은 문화관광자원은 사람, 곧 지역주민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식은 보수적이며 폐쇄적이어서 이해조정과 합의 형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쉽고 전문가도 아니며 경험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문화환경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포럼, 캠프 등을 활발히 개최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지역내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잡지(community communication magazine)을 발행한다.

□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마인드와 지역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안내와 해설, 관광자원의 개발, 이벤트 기획 등에 대해 연수회 개최, 전문가 초청 및 활용하도록 한다. 통해 여기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민단체는 지역내외부의 관련 전문가, 시민을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및 문화유산 지키기 캠페인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대안은 기본적인 것들일 수 밖에 없지만 이제 보다 전방위적이고 다 차원적이고 범시민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필요한 예산의 책정, 예산집행체제의 재정비, 그리고 관리운영체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민간차원에서는 문화재단과 시민단체가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유산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도록 한다.

□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관광을 보존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각종 지역개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환경의 파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전통건축과 유적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내외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V. 결 론

관광산업의 성패는 ‘관광을 끝내고 떠나는 사람이 그곳을 다시 찾아올 마음이 있는 가, 없

는 가에 달려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불행하게도 한국은 다시는 오지 못할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원인은 편안한 호텔과 관광지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볼거리 부족과 언어소통과 불친절로 나타났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설을 만드는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와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주와 같은 문화관광지가 대부분 그렇듯이 도대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볼 것이 없고, 저녁만 먹고 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는 지적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볼거리와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서도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체험할 수 없다면, 한번 찾은 관광객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굳이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지금 문화관광을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문화관광개발은 관광을 통해 삶의 터전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어나간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매력을 창조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지역주민과 지역자본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원확보방안, 개발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방안, 개발주체의 설정방법, 상품개발 및 마케팅방안에 이르는 민관(民官)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의제사업은 어디를 채울 것인가보다 어디부터 비울 것인가, 무엇을 하자보다 무엇을 하지말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 처음부터 모든 것이 짜인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지와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지역, 문화가 만들어 지면 관광객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겸(1999),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1998), “지역사회관광개발의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 김남조(199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 참여」, 한국관광연구원
- 손대현(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 임재해(1999.12),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자원과 구상”, 「대구경북개발연구」
- Jamal, T. B. and D. Getz(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2 No.1, p.186-204
- Keogh, B(1990),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7 No.3, p.449-465

Simmons, D G(199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15(2) p.98-108

WTO(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Guide for Local Planners*